

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(주요정책 부문)

2019. 1

국토교통부

1. 평가개요

(1) 중점 평가방향

□ 부서간 칸막이 없는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협업과제 지속 추진

- 평창올림픽 지원, 남북 도로·철도사업 추진 등 단일 부서의 역량으로 달성이 어렵거나 협력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정책중심 추진

☞ 목표가 동일한 부서별 과제를 협업과제로 관리하여 부서간 인력과 정책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 제고

□ 계획이행의 충실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원점수로 반영

- 정량적으로 산정되는 계획이행의 충실성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표준화 평가됨에 따라 적극적 노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애로

* 표준화($\frac{X(\text{과제별 원점수}) - \text{소위별 평균}}{\text{소위별 표준편차}}$) 시 소위별 평균·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나 소위별 차이가 없는 정량적 지표의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

☞ 충실성과 달성도 점수를 원점수로 반영하고, 평가지표 수준의 객관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감사관실과 중복 검증

□ 평가의 대응성 및 투명성 강화

-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CEO 및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만족도 조사결과 반영비율을 확대(5점→10점)

□ 과제내용 중심의 난이도 평가

- 과제의 유형보다는 실질적인 과업내용에 따라 난이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제 유형별 난이도 등급 배분 조정

* CEO과제 난이도 S등급 비중 감축 / 실국장과제 S등급 비중 확대

(2) 평가추진 개요

□ 평가추진 체계

-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·운영
 - 국토, 주택, 건설·수자원, 교통, 도로·철도, 항공 등 전문 분야별로 7개의 소위원회(소위별 3~5명 위원 구성)를 구성·운영
 - 소위원장들로 구성된 CEO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, CEO과제를 소위와 별도로 통합평가하고 소위별 이의신청을 최종 조정



□ 평가방법

-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 실시
 - 난이도 평가(18.6)→과제이행 노력도 및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(19.1)
- CEO평가위에서 먼저 CEO·협업과제를 평가(CEO 23개, 협업 7개)한 후 각 소위별로 실국장 과제를 평가
-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CEO평가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
-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결과를 심의·확정

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○ 평가대상 : 총 96개 과제

○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가지표	측정방법(측정기준)	배점 (100)	평가 시기
과제 난이도	○ 성과지표의 난이도	·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·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정도 ·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(법 제정 등)	30	‘18.6
과제이행 노력도	○ 계획이행의 충실성	·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	20	35
	○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	·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· 여건 · 상황변화에 대응정도 ·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	15	
과제목표 달성도	○ 성과지표의 달성도	·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	20	35
	○ 정책효과 발생정도 (CEO·협업과제는 10점)	·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·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	15 (5)	
	○ 정책만족도 (CEO·협업과제)	· CEO·협업 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및 인지도 정도	(10)	

<가점 기준, 최대 1점>

평가항목	가점 항목
기관대표지표	○ 기관대표지표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가점 부여(최대 1점)

<감점 기준, 최대 -1점>

평가항목	감점 항목
국정과제 등 반영 및 이행 정도	○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계획에 반영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과의 관련 과제에 감점(최대 -1점) - 계획 미반영(-0.5점), 계획반영 · 목표치 하향 조치(-0.5점)

2. 평가결과

(1) 총 평

□ 총 102개 과 中 92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
- 매우우수 5개(5%), 우수 15개(15%), 다소 우수+ 15개(15%), 보통 30개(30%), 다소 미흡 15개(15%), 미흡 15개(15%), 부진 5개(5%)

구 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
관련 부서 수(BSC 단위부서)	본부 100개	본부 107개	본부 102개
과제 개수	201개	100개	92개
지표 개수	341개	356개	325개
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률	90% (33개 지표 미달성)	95% (16개 지표 미달성)	96.62% (11개 지표 미달성)
평균 점수(과제)	88.89	92.41	92.73
최대값-최소값(과제)	18.32	14.72	12.00
표준편차	3.43	3.08	2.99

- 매우우수 과제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, 물류 불공정 관행 개선, 스마트시티 조성,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및 사업 승인 추진, 스마트 공항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공항 운영 선진화 등으로 평가됨
- 부진 과제는 항공분야 교통약자 보호제도 마련,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 체계 구축, 첨단기술을 활용한 항공보안체계 구축 등으로 평가됨

□ 총 92개의 관리과제의 32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6.62%로

- 31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1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

* 다만, 법령 개정 목표인 경우 법안 국회제출 실적 등 지표의 부분 달성에 대해서는 달성 비율에 따라 등급화하여 산정(50~90%)

(2) 주요성과

◆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,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, 교통 공공성 강화 등 19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

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기반 마련

- 투기수요 차단(9.13대책) 및 주택공급 확대(9.21, 12.19대책)를 통해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고 재건축 규제 정상화, 청약 개편 등 실수요 보호 강화
- 「주거복지로드맵」(‘17.11.29) 시행에 더하여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(4.5만호)하는 등 수요자 맞춤 지원을 강화*
 - * (‘18) 약 139.3만 가구 지원(공공주택 21.3만호, 주거급여 95만가구, 주거비지원 23만가구 등)
- 주거급여 대상 확대(‘18.10~, 부양의무 기준 폐지), 취약계층 및 고령자 주거대책 마련(‘18.10) 등 주거복지가 절실한 가구에 지원 강화
-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임대료 인상 제한, 의무 임대기간 등 공적 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35% 증가(‘17, 98만채 → ‘18, 132.5만채)

2 광역교통 확충을 통한 출·퇴근 부담 완화

- 만성적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정책 조정·투자확대를 전담하는 ‘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’ 설립 근거 마련(‘18.11, 법 개정)
- 광역급행열차를 확대(‘18.7)하고,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(운정~삼성) 착공, C노선(덕정~수원)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(‘18.12) 등 사업 가속화

3 교통서비스 공공성 및 소비자 보호 강화

- 서울외곽 등 민자도로 3개 노선 통행료를 인하(970억원/年 경감)하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 수립(‘18.8, ‘동일 서비스-동일 요금’ 목표)
 - * 서울외곽(4,800→3,200원, 33%↓), 서울춘천(6,800→5,700원, 16%↓), 수원광명(2,900→2,600원, 11%↓)
- BMW 화재사고에 대응,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, 입증책임 전환 등 「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」(‘18.9) 추진

4 지역 거점간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

- (도로) 부산외곽순환 등 고속도로 4개 노선(110.9km), 고현-하동 등 국도 36개 구간(256km)을 개통하는 등 간선망 지속 확충
- (철도) 포항-영덕 동해선('18.1), 소사-원시 복선전철('18.6)을 차질없이 개통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·고시('18.8)등 고속망 확대
- (공항) 인천공항 T2를 성공적으로 개항('18.1, 年 7,200만명 수용)하고 김포공항 국내선 리모델링('18.10) 등을 통해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

5 건설 및 교통분야 안전 수준 제고

- (건설) 현장책임 강화, 타워크레인·굴착공사 등 고위험공사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'18년 타워크레인 사망 無사고 등 안전 강화
- (교통) 「교통안전종합대책」 수립('18.3) 등 전방위 예방·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2년만에 3,800명 대 아래로 감소

6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역점사업 본격 착수

- 새만금공사를 설립('18.9)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,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'혁신도시 시즌2' 추진
-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18곳 착공('17년 선정 68곳中), 99곳을 신규 선정('18.8)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, 상가임차인 보호 등 상생기반 조성

7 산업체질 개선 및 일자리 지원 강화

- (총괄) 新산업 육성, 창업 등을 담은 「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」을 수립('18.5)하고, 저소득층 지원 항공장학재단 설립('18.12) 등 과제 이행
- (건설) 40여년 지속된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등 '건설산업 혁신방안' 추진('18.12, 법 개정), 임금체불 방지 등 건설 일자리 질 개선
- (운수) 적정운임 보장, 과적 방지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('18.4)하고, 「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」('18.12)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

⑧ 국토교통의 미래 준비

- (혁신성장)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수립('18.12, 세종·부산), 자율차 가상실험도시 K-City 완공·개방('18.12) 등 성과 가시화중
- (남북협력) 「4.27 판문점 선언」 계기, 남북 도로·철도 착공식(12.26)을 개최하고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('18.6) 등 협력기반 마련

(3) 개선·보완 사항

◆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,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체계 구축 등 17개 과제는 미흡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

①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 점증

- 자동차 리콜대수 급증('12, 21만대→'18, 264만대, 6년간 10배 이상 증가), BMW 사태 등을 계기로 제작사의 결함은폐·리콜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요구
- 항공분야의 잦은 회항·긴급상황 대응 미숙, 오송역 단선장애(11.20)·KTX 강릉선 탈선(12.8) 등 빈번한 철도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 증가

② 산업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경제 활력 저하

- 택시-ICT 카풀 업계의 갈등 사례와 같이 새롭게 출현한 서비스와 기존 산업 종사자 보호 문제가 상충하는 등 新-舊 업계 갈등 지속
* '18.4월부터 택시업계와 택시서비스 개선방안, ICT 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해 40여차례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 지연
- 해외건설 시장 패러다임이 '수주에서 투자'로 변화하면서 도급 중심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대응방안을 재정비 할 필요

③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

- 항공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갑질 등 항공사 경영 윤리가 사회적 논란을 유발하고 외국인 임원 등 면허관리 행정 부실 지적
- 국민 정서·요구에 대한 세심한 공감 부족으로 다산신도시內 택배 대란('18.4) 등 대응 과정에서 국민적 논란 촉발

(4) 평가결과 종합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결과
I.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.		
1. 자립과 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한다.		
	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국토비전 마련	보통
	②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	보통
	③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(오픈캠퍼스) 운영	미흡
	④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(새만금, 행복도시) 활성화	우수
	⑤ 혁신적인 지역발전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활력 제고	다소 우수
	⑥ 수도권외 계획적 관리기반 강화	보통
	⑦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및 연계협력기반 마련	미흡
2. 쇠퇴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.		
	① 도시재생 뉴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축	보통
	②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동산 시장관리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응	다소 우수
	③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	다소 미흡
	④ 뉴딜사업 연계 재난지역 도시재생 추진	미흡
	⑤ 지속가능한 노후산단 재생사업 기틀마련	보통
	⑥ 판교 2밸리 활성화 및 지방 확산	우수
3.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.		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결과
	① 비상대비·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	다소 미흡
	②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	보통
	③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	다소 우수
	④ 건축물 화재·지진안전성능 강화	우수
	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구축	보통
	⑥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도로 안전·재난 관리 체계 강화	보통
4.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실현한다.		
	① 국토공간 품격향상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선진화·산업진흥	다소 미흡
	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·추진	우수
	③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개편	미흡
	④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강화	다소 우수
	⑤ 4대강 보·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	다소 미흡
	⑥ 남북 교류 협력 등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	우수
II.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 관리한다.		
1.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·관리 제도를 개선한다.		
	① 청년·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임대 공급 본격화	보통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결과
	②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및 공공주택 사업승인 추진	매우 우수
2.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추진한다.		
	①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	우수
	② 청년·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및 청약제도 개편	우수
	③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	다소 미흡
3.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.		
	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	다소 우수
	②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재건축 부담금 정상부과를 위한 기반구축	매우 우수
	③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	보통
	④ 비주거부동산 개발·분양시장 질서 확립	다소 미흡
Ⅲ.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.		
1.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.		
	① 수도권 출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	다소 우수
	② 철도운영선진화를 통한 철도서비스 향상	우수
	③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확대	다소 미흡
	④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등 광역철도망의 지속적 구축	보통
2.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.		
	① 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	보통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결과
	②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~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	보통
	③ 철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철도공공성 강화로 국민편의 증진	다소 우수
	④ 혁신도시 등 철도역 배후도시 연계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	다소 우수
	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공항 건설	보통
	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항공분야 교통약자 보호제도 마련	부진
3. 교통비를 절감하고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.		
	① 행정체계·교통요금 개편을 통한 교통 공공성 강화	우수
	②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	다소 우수
	③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및 세계 시장 개척	우수
	④ 이용자가 편리한 경쟁력 있는 철도 건설	미흡
	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	미흡
	⑥ 한·중·일 싱글스카이 기반 구축	다소 우수
4.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.		
	① 교통사고 사망자 수 3,000명대로 줄이기	우수
	② 아파트 단지, 주차장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	보통
	③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람 중심 안전 강화 도로기준 마련	미흡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결과
	④ 현장 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확립	보통
	⑤ 철도안전산업 육성 기반 마련	다소 미흡
	⑥ 공항시설 안전관리 강화	미흡
	⑦ 항공안전 서비스 품질제고로 사고율 감축	다소 미흡
	⑧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항공보안체계구축	부진
IV.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.		
1.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.		
	①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	다소 우수
	② 미래항공분야 청년일자리(조종·정비 인력) 추진	보통
	③ 대형 상장리츠 활성화 및 건전성 강화	보통
	④ 감정평가산업 공정경쟁 강화	다소 미흡
	⑤ 국토교통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	다소 미흡
	⑥ 전략적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	다소 미흡
	⑦ 항공산업 발전지원을 위한 제작산업 활성화 추진	미흡
2. 생활공간 속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.		
	①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추진	매우 우수
	②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확대 등 상용화 토대 마련	다소 우수
	③ 규제혁신 및 인프라 확대로 미래 드론산업 육성기반 마련	우수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결과
	④ 공공선도형 모델 확산으로 드론산업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	보통
	⑤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체계 구축	부진
	⑥ 스마트공항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공항운영 선진화	매우 우수
3. 신산업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를 고도화한다.		
	① 공간정보를 활용한 ‘일자리 만들기’ 인프라 지원	다소 미흡
	② 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공간정보 청년일자리 창출	보통
	③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 지원	미흡
	④ 국민 중심의 협업사업을 통한 지적재조사체계 구축	미흡
	⑤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추진	부진
	⑥ 소 국토 정밀위치보정서비스 체계 구축	미흡
V. 국토교통 산업의 상생·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		
1. 건설산업 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		
	① 건설산업 구조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추진	보통
	②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및 건설생산성·안전 혁신	보통
	③ 고부가가치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전략적 지원	우수
	④ 신남방·북방경제 전략과 연계한 전략적 해외인프라 진출	보통
	⑤ 발주제도·건설기준 글로벌화를 통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강화	미흡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결과
2. 물류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.		
	① 화물운송시장 종사자 보호 및 경쟁력 강화	우수
	② 물류 불공정 관행 및 일자리 개선	매우 우수
	③ 물류시설 첨단·자동화 및 이용 활성화	미흡
3.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중심 국토교통행정을 구현한다.		
	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	보통
	② 뉴디미어 등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	보통
	③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	보통
	④ 국회 법률심사 및 입법과정 대응 효율화	다소 우수
	⑤ 국토교통 빅데이터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활성화 도모	다소 미흡
	⑥ 자동차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	다소 우수
	⑦ 자동차공제조합 감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	보통

3.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

【전략목표 I】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.

◆ 성과목표 1. 자립과 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한다.

1

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새로운 국토비전 마련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제5차 국토종합계획) 시안 마련 전 과정에 국민·지역이 직접 참여하여 '72년 이후 최초로 소통·협력적인 계획수립 추진
 - * 심포지엄(3월), 국민소통 온라인 플랫폼(7월 오픈), 청소년 설문조사(10월), 국민참여단 회의(11월)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계획 수립
- 지자체 참여하는 국토계획연구단, 공감 세미나(7월) 및 찾아가는 지역설명회(6회), 계획제안 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견 수렴
- (국토-환경계획 연계) 국토부·환경부 TF를 통한 이해관계 조정, 전문가 포럼,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동훈령 조기 제정 완료('18.3)
-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('18.10), 양부처가 정책여건 및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- (국토계획평가) 제도 개선*('18.12)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과다추정 등 관행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
 - * 평가항목 통폐합(6→4개) 및 용어 명확화,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토-환경계획간 실효성 있는 연계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 연계지표를 보완하고 특히 지자체 계획 연계를 위한 수립지침 등 제공 필요
- 국토계획평가 제도개선은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되는 제도로 계획수립권자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국토에 대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며,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	국토부·환경부 차관급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 일정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국민참여단 구성, 온라인 플랫폼 오픈, 국민생각함 운영 등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과정에 국민과 소통을 위한 장치 마련, 상향식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계획제안 제도 도입 등 여건 대응 우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5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마련을 통해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상을 담은 비전과 목표 제시, 국토-환경 계획 연계를 위한 공동훈련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 기대
3-3. 정책만족도	9.0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자체와 T/F를 구성·운영('18.4~7월)하여 계획 방향, 발전전략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계획간 정합성 확보
 - * 언론 및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(8.16, 국토연), 혁신도시 특별위원회 자문회의(10.18, 균형위)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
-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실현가능성 검토·조정, 타부처와의 연계 방안 추가,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종합발전계획안 마련('18.9월)
 - 지역 전략산업, 이전 공공기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테마를 선정하고, 맞춤형 발전전략도 수립
- 균형위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 최초 수립('18.10월)
 - 혁신도시 정책을 공공기관 이전 중심에서 新지역발전거점 육성 지원(시즌2)으로 전환하여 체계적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수립
 -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토대로 종합발전계획 수립(Bottom-up)
 - * 추진과제 선정 시 타 부처 계획, 기존 정책사업, 주요 국정기조 등과 연계하여 정책효과의 시너지 및 실행가능성 제고 기대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, 그에 따른 환류체계 구축 필요
 - * 종합발전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행정·재정 차등지원 可(혁신도시법)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운영, 언론 및 이전기관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, 관계 기관 이전 조율을 통해 부처간 연계방안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등 여건 대응 우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으로 균형발전의 기반 마련
3-3. 정책만족도	8.8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부산·대구·광주전남 등 7개 혁신도시 소재 10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과정(오픈캠퍼스) 운영
 - 광주전남 소재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6개 지역대학 재학생이 참여하는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(1~3학점 부여) 운영
 - *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한 직무 및 현장 견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취업 및 진로 모색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도 유지
- 정부는 선도 참여기관의 지역교육과정 운영사례 전파 및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교육과정(오픈캠퍼스) 운영 확산
 - * ('18년) 10개 → ('19년) 20개 이전공공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 참여 확대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이전공공기관 나름대로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나, 비정규 교육기관으로서 사업 참여에 한계
 - 이전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기능상의 차이 등 개별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참여 유도에는 애로 상존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이전공공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역량이 있는 기관에 운영 컨설팅, 유관기관 협의를 지원하는 등 사업 참여 유도를 집중
 - * 지역교육과정 우수 운영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이전기관·지자체 등 지역별 간담회, 종합워크숍 등을 통해 오픈캠퍼스 운영을 위한 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이전공공기관 취업 지원도모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< 새만금 >

- (새만금개발공사 설립) 민간참여 저조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을 공공 주도로 안정적·지속적으로 개발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('18.9)
 - 새만금청도 연내 공사와 같은 위치(군산 새만금산단)로 이전('18.12)
- (공사 추진사업) 선도매립사업 절차를 사전에 이행(예타, '18.8~)하고, 행정절차 단축 위한 새만금법 개정('18.12)으로 착공시기 단축('21→'20)
 - *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, 연관산업 투자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('18.10)
- (투자여건 개선)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 '18년 새만금 SOC 예산 추경확보 등 집중투자를 통해 인프라 조기 확충 추진

< 행복도시 >

- (중앙부처 추가이전) 행복도시특별법 개정('17.9) 이후 후속조치로 이전고시,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및 신청사 설계안 확정
- (성장동력 확충)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및 대학·연구소·기업 유치, 스마트시티 추진 등 성장동력 확충으로 자족적 성장기반 강화
- (상생발전 방안) 지역별 자원을 연계·활용하는 광역권 장기발전방안 마련 및 광역도로망(18개 118km) 중 7개 노선 개통(67km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새만금) 선도매립, 부대수익사업(재생에너지 등)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(인허가 등)을 조속 추진하여 성과 조기 가시화 필요
- (행복도시)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도시가 조기 활성화 되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등 도시완성도 제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현장간담회, 새만금위원회, 정책포럼, 유관기관 협의체, 투자기업 해외설명회 등 주민·기업·관계부처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반영 노력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법안 국회 조기통과를 위해 지역과 협력 등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새만금개발 공사 설립 등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 체계 전환 및 선도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투자기업 증가 등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행복도시의 행정기관 추가이전 준비 등 중앙행정 기능 확충, 기업 투자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,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행정중심도시의 위상 및 기능 강화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인구감소 대응) 인구감소, 분권화 등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낙후지역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 제고
 - 접근성에 기반 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인프라 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인프라 투자효율성 제고
 -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체의 실질적 참여 유도를 통해 분권화 토대 구축
- (지역 지원체계) 정보시스템 구축,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지역 역량강화로 지역 주도 발전모델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
 -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실증기반 정책수립 체계를 제공하고, 고품질 맞춤형 컨설팅으로 양적 증대→질적 향상으로 전환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지역개발 공모개선) 지방분권 강화 흐름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, 공모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개발공모체계 개편
- (지역 지원체계) 지역주도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컨설팅, 디자인관리체계 도입 등 지역지원체계를 확대 및 강화
 - 지역맞춤형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('18년 6개→'19, 20개)하고, 디자인 시범사업도 예산지원(마스터플랜 수립지원 5개×1억원) 등을 통해 본격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 설명회, 전문가 토론회, 지자체 협의회·간담회 등 의견수렴 활동,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여건 분석 등 현장 소통 및 여건 대응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생활인프라 최소기준 마련, 전문기관을 활용한 지역혁신 컨설팅 지원 등 지역 지원체계 강화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개별공장 난립 방지 및 계획입지 유도를 위한 공장총량제 운영 개선
 - '18~'20년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분 시, 개별입지 비율이 높은 경기도*의 경우 요구대비 개별입지 비율 축소(85%요구→70%, 전기 75%)
 - *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자연보전권역은 96%가 개별입지(과밀억제권역 57%, 성장관리권역 72%), 화성, 김포 등 성장관리권역은 공장 수 급증 추세
- 개별공장의 난립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진과의 논의 및 개별입지 공장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 실시
 - *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차원에서의 관련 규정(시행령, 위원회 운영규정 등)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검토
- ☞ 수도권 난개발 양상, 원인 등 그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을 취합하여 실효성 있는 개별공장 난립 방지 방안 마련
- 인구·산업·공장 3개 부문, 인구-산업 균형지표 등 총 24개 지표 마련 및 지표분석(지표값을 5구간 구분하여 도면으로 시각화)
 - * 수도권 시군구 단위로 분석함으로써 수도권간(66개시군구), 수도권/비수도권, 전국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수도권 현황 파악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표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인 수도권 관리체계 구축 필요
 - *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연구('18~'20)과 연계하여 제도적 방안 모색
- 난개발 방지, 권역별 정비방안 등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사항(공장총량제, 산단 공급계획 연계 방안 등) 발굴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 · 전문가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, 수도권-비수도권간 균형을 고려한 규제관리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장총량제 운영 개선, 수도권 적정관리지표 개발 등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수도권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
 - 「해안내륙발전법」 존속기한 연장('20→'30) 개정안 본회의 통과('18.12)
- 남해안 관광거점 기본구상 내 중점 추진사업 실행계획 마련('18.11)
 - * 오션뷰 명소화, 남해안도로경관,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, 테마섬 투어상품 개발, 해양관광진흥지구
-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마스터 플랜 국제공모 및 일반인 아이디어 공모('18.4~'18.10), 시설 리모델링 사업 착수('18.12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해안내륙발전법 존속기한* (2020년 만료 예정)으로 인하여 예산심의 당시 2019년 신규사업예산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일부 확보
 - * 존속기한 연장(2020년 → 2030년)을 위한 해안내륙발전법 개정 완료('18.12.3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신규 지역계획의 해안·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과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, 관계기관 협의, 학계 · 예술계 등 의견 수렴 확대 등 사업성 제고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지역에 해안경관도로, 테마섬 투어상품,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등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다양한 지역발전 모델 제시,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국내 관광 활성화 유도

◆ 성과목표 2 쇠퇴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.

1

도시재생 뉴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인프라 구축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수립) 금년부터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추진전략 및 계획인 ‘도시재생 뉴딜 로드맵’ 발표(‘18.3)
 - 노후 주거지에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,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공간 250곳 조성계획
- (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)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
- (시범사업 본격 착수) ‘17년에 선정한 시범사업(68곳)은 활성화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주민참여, 거버넌스 등이 준비된 지역부터 착공(18곳)
 - * 부처 연계사업 발굴·추진, 도시재생특위 심의 효율화를 위한 ‘도시재생 특위 실무위원회’를 제도화(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, ‘18.6)
- (선정권한 이양 등) 지역주도의 뉴딜사업이 되도록 선정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시·도가 선정하는 비율 확대(‘17, 65%→’18, 70%)
 - ‘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’, ‘스마트시티’ 등 혁신 거점공간 조성 추진
- (제도개선) 도시재생 혁신지구,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등 구도심의 혁신공간 조기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(11.28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도시재생(현장)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
 - * 도시·건축·토목·디자인 등 도시재생분야 청년 고용을 확대해 도시재생 전문가로 육성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통한 로드맵 마련, 도시재생 한마당 등을 통해 지역참여를 유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'17년 선정 시범사업 본격 추진(18곳 착공), '18년 신규사업 99곳 선정, 사업권한 지방이양 등 지역 주도의 추진체계 마련과 함께 현장지원센터 · 주민협의체 운영 등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
3-3. 정책만족도	9.0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시장안정 관리) '17년 사업(후보)지 시군구 부동산 상황을 안정(1단계), 우려(2단계), 심각(3단계)으로 구분, 맞춤형 모니터링 시행('17.9~'18.6)
 -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'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(후보)지역(시군구) 시장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과열진단지표* 개발 및 관리
 - * (구성요소) 가격변화(토지·주택), 거래변화(인근지역, 도시재생지역 및 외지인 거래비율)
 - '17년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에 대해, 부동산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·소규모사업 7곳 선정('18.8)
 - * 일부 지역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중·대규모 사업 배제
- (젠트리피케이션 대책마련) 계획수립 단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*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병행해 추진
 - *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기간 연장 등 「상가임대차법」 개정 연계(부동산산업과)
- (사업선정) 공모단계부터 상생계획 수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선정
- (제도 개선) 상권주체간 자발적 임대료 안정을 위한 '상생협약 체결' 근거를 마련(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, '18.6)하고,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('18.12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이 매년 확대*됨에 따라, 대상지역 선정 전·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·예산 확보 필요
 - * '17년 68곳, '18년 99곳을 선정했으며, '19년도 100여곳 선정 예정
- ☞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'19년도 예산(728백만원) 기 반영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사업지 시군구 부동산 상황 모니터링과 합동점검을 통한 시장관리, 7차례 간담회, 토론회 등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마련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부동산시장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사업선정 전·후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로 대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 유지, 사업계획 수립 시, 대상지역내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'18년 선정사업 중 45곳 이상에서 상생계획 수립
3-3. 정책만족도	8.7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스마트재생 확산)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수요자 등을 고려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표준모델(안) 개발('18.12)

* 스마트 도시재생뉴딜 표준모델 수립용역 추진중('18.5~'19.4)

- (시범사업 추진) '18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5곳* 선정('18.8), 스마트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성·운영('18.6~)

* 김해(중심), 포항(경제), 울산 동구(일반), 제천(우리), 대구 북구(공공-중심)

- 스마트 도시재생 네트워크는 관련 학계·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시범사업의 컨설팅 및 관련 스마트 업계 사업참여 유도 추진

- (민간참여 확대) 리빙랩*에 스마트 시티 관련 스타트업 기업 등이 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시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공모 시행('18.11)

*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서비스를 보완하는 프로세스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지자체 공무원 등이 스마트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 참고·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표준모델 보완 및 배포를 통해 스마트 도시재생을 시범사업 대상지 뿐만 아니라 전체 뉴딜사업 대상지에 확대·적용할 필요

* 쇠퇴지역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 기술요소(스마트 주차시스템, 스마트 쓰레기 집하 시스템 등)를 발굴하여 주민의 실생활에서 스마트시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실사용자인 주민·상인, 지자체, 업계,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계획·정책에 반영 노력 및 국제 컨퍼런스, 한-중남미 포럼 등 해외 전문가 교류도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 5곳을 신규로 선정 추진,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 제시 등 지원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 시행('18.4.17)
 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주택 및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대규모 피해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포항 홍해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특별재생계획 수립('18.11.14)
 - '17.11.15 지진으로 주택, 기반시설 붕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포항 홍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, 계획(안) 승인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특별재생지역 도입을 위한 「도시재생특별법」은 개정('18.4월)되었으나, 재난 피해 관련 법령 제·개정*이 이루어지지 않아, 재난 피해 복구지원 현실화 등 관련 지역사회의 민원·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
 - *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, 지진지해로 인한 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, 지진·화산재해 대책법 개정,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전파 공동주택 정비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, 지역 명소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
 - * 사업부지확보를 위한 보상협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·지원
- 문체부, 행안부, 중기부 등 관계 부처 협업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·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, 사업추진 독려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시급한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주민·지자체·전문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피해금액 기준 마련, 재생계획 수립 등 신속 대응 노력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부처연계사업 발굴·재생계획에 포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포항 지진 피해지역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, 특별재생지역 지정, 재생계획 수립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도시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기존 산단재생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분석하고, 첨단 제조업 혁신,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 위한 '노후산단 경쟁력강화 방안' 마련(5월)
 - (계획기준) 재생사업 추진절차와 시행방법 등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「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 가이드라인」 확정 및 배포(9.27)
 - (실증지구) 재생계획을 수립중인 실증지구 2개소를 선정(3.30)하여 계획수립 기간 단축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 등 지원
- 노후산단을 전략적으로 재생하여 첨단산업 단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기금융자상품을 개발, '19년 예산 확보
- 산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거점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개선방안 추진
 - *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시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에 위임
- (산단재생사업 추진) 적극적 사업관리를 통해 3개소 공사 추진*, 4개소** 착공 등 사업착수 및 4개소*** 시행계획 수립 착수
 - * 대전, 대구도심, 전주, ** 부산, 양산, 청주, 대구3, *** 성남, 진주, 대구염색, 대구성서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증지구를 추가 선정하여 계획수립 기간 단축, 지역여건 맞는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할 필요
-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은 실수요 조사 등을 통해 산업단지 맞춤형 모델(복합개발·기반시설형)을 개발하였으나,
 - 성공모델 확산·운영 등을 고려 시 다양한 유형의 모델 개발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전문가 자문회의·간담회, 지자체·관계부처 등 의견 조희, 업계·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노력, 노후 산단 지원체계 이원화(국토부·산업부) 지적(국회 예결위) 등에 대해 공동 사업 추진 기획 등 대응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노후산단 재생사업 계획 기준 배포, 실증지구 지원 등 사업시행자에 효율적인 재생사업 지원, 주택 도시 기금 사용 모델 개발 및 민간 재투자 기준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 등 노후산단 활성화 지원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공공임대공간 3개동이 준공되어 345개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
 - (기업지원허브)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입주기업 200개(1,250명)에게 컨설팅, 교육, 테스트베드 제공 등 5,000 여건의 사업지원(~'18.12)
 - (기업성장센터) '18년도에 2개동이 준공되었으며, 창업지원기관 1개소(게임부스트센터, 문체부) 및 145개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
- 무상 창업공간(연면적의 30%) 등이 포함된 벤처·혁신타운 용지의 분양자 선정을 완료('18.5)하였고, 해당 건축물 설계 중('20.착공)
- 지방 도시첨단산단을 거점으로 판교형 혁신모델* 확산
 - 판교 기업지원허브를 벤치마킹한 혁신성장센터('19, 82.3억원 확보)를 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설치하여 혁신·창업형 산단으로 조성 추진
 - * 도첨산단 후보지 11개소 중 기 지정된 4개소(대구, 인천, 순천, 광주) 우선 추진
 - 「판교2밸리 등 혁신성장형 산단 조성 관계기관 TF」를 구성·운영('18.9~)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추진 동력 확보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혁신성장센터 내 창업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발굴
 - 지자체 요구 시설에 대해 관계부처(과기부, 중기부, 문체부)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창업·혁신·재도전 프로그램을 발굴 및 종합지원
 - * 「판교2밸리 등 혁신성장형 산업단지 조성 관계기관 TF」를 적극 활용
- 판교를 스마트산단으로 조성('19년, 관련기술 도입 등 공사 착수)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기업지원허브 입주기관 정례회의(월1회),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업 노력, 편교2밸리 개방성 부족 등 일부 지정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개선책 마련 등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판교2밸리 입주기업 목표 초과 달성, 지방 도시첨단산단 내 혁신성장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·혁신생태계 조성 기여

◆ 성과목표 3.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.

1

비상대비·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

다소 미흡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전시 상황전파 체계가동 훈련 및 군 단독 태극연습시 정부대응반 운용 등 군사상황과 연계한 상황조치 훈련 참여로 전·평시 위기대응 역량 제고
 - * 위기관리훈련 KR(Key Resolve)연습 정부대응반 운용(4.23-27), 비상대비정보시스템 가동 및 국가지도통신망 전환훈련(8.29-31), 태극연습 정부 대응반 운영(10.29~11.2) 등
- 소관 국가중요시설 지도·점검을 통해 비상대비·통합방위 대응태세 확립
-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재난관리평가 강화 및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관리를 통해 성과중심 안전관리 실현
 - 국토부 주관 9개 재난유형에 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('18.5) 및 상시훈련('18.3~11)을 추진하여 실제 작동 가능한 재난대응역량 제고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국내외의 포괄적 안보위협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현안 정취 및 현장 의견조율 등에 대한 적극성 및 문제해결 노력 다소 미흡
- 재난시 사고상황에 대한 종합관리, 매뉴얼, 상시·불시훈련 실시 및 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애로
 - * 재난안전 업무부서에 대한 부서 기피 및 신규 보직자의 업무이해도가 낮음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가동원업무에 대한 중점관리지정업체의 호응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할 필요
 - * 재난안전 업무 기피로 인한 사기저하, 신규자의 낮은 업무이해도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, 교육 확대 등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현장업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 청취, 전문교육 실시로 담당자 업무이해도 제고, 최근 남북관계 발전 등의 정세변화와 국가안보상황변화에 즉각 대처가 가능한 대응체계유지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비상업무계획을 마련하는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, 중앙부처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
3-3. 정책만족도	9.2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총괄) 주체별 책임 강화, 고위험공사 안전대책*을 수립·이행하고,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 등 건설안전 강화정책 추진

*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(1월), 공공 건설시공·안전강화방안(7월), 굴착공사 안전대책(10월)

- 그 결과,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

* ('14) 434명 → ('15) 437명 → ('16) 499명 → ('17) 506명 → ('18.9) 344명(전년 대비 56명 ↓)

- (발주자·원청 책임 강화) 계획단계에서 적정공기 및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, 사전안전관리활동 평가·공개 등 공공발주자 책임 강화

- 중대사고에 대한 벌점 신설 등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원수급인에 대한 제재 강화(시행령 개정 추진)

- (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)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국토청의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전산망도 구축 착수

- (건설기계 안전 강화) 사고가 빈번한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「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」 마련(4.10.)

- (첨단기술 활용) IoT,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현장안전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려방안*도 추진

*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단기술 활용 비용 추가(건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중대사고 시 벌점 신설(시행령), 첨단기술 현장 안전관리 활용(시행규칙) 등 법령 개정이 다소 지연*되어 신속하게 마무리할 필요(12.31, 입법예고)

* 가산동(8.31.) 및 상도동(9.6.) 사고 등 굴착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긴급 수립(10.18, 국정현안조정회의)으로 지연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1	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미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‘건설안전 협력 T/F’ 운영 등 의견 수렴, 건설현장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50	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미완료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개정, 현장점검, 각종 안전대책 등으로 4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 사망자 감소 전망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노후장비의 연식제한, 중요부품의 내구연한 도입, 부품인증제 등 안전제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완료(9월)
 - * 검사총괄기관 지정, 검사기관 평가제 도입, 부실기관 처벌 강화 등 검사제도 개편 포함
- 불법 개조·허위 연식 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(10월),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불시 안전점검('18.12~'19.1), 검사기관의 업무실패 하반기 불시점검(12월) 시행
- 타워크레인의 설치현황, 등록정보, 검사정보, 정비정보, 사고정보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이력관리시스템 구축(12월)
 - 전체 등록대수(6,319대, '18.11월) 중 정기검사 시 설치 장소가 확인된 약 2천대의 장비에 대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시범운영
- ☞ 위와 같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과 노력으로 타워크레인 중대 사고 대폭 감소('17. 54명 → '18. 0명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으로 '18년도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사고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,
 - 일부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설비 사고*는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 필요
 - * (11.3)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, (11.20) 부산 아파트 신축현장 설비 꺾임
 - 아울러 불법개조 후 허위 연식으로 등록한 무인 타워크레인이 적발('18.8)되는 등 여전히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어 적극 대응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크레인 전수조사, 50여개 현장 불시 안전점검 등 대응, 협외·제작사·임대업체 등 의견 청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타워크레인 중대재해발생 건수 대폭 감소 ('17년 6건→ '18년 0건)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불특정다수 또는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의 화재성능 보강 의무화, 지원사업 신설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성능보강 방안* 마련

* 학계·업계·연구기관·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TF를 구성('18.3)하여 논의

-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, 피난시설 설치기준, 불량 건축자재 점검 등 신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강화

- 또한 불량 샌드위치 패널, 불량 방화문 유통 등에 대한 문제지적 (언론보도 등)에 대응하여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확대 및 법령 개정안 마련

* ('18) 4억원 → ('19) 8억원 / 위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('18.5)

- 내진성능 간소화 평가기법 신규개발, 인센티브 방안 발굴 등 민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방안 마련 및 구조기준 강화

* 지진·구조·R&D 전문가와 보강 의무화 여부 및 우선순위 도출 관련 공청회 개최('18.10)

- '17.11 포항지진 이후 행안부·국토부 등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「지진방재 개선대책」을 마련하여 발표('18.5)

- 전국 노후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

- 17개 지자체의 정비구역, 공사장 주변 노후 조적조 건축물 총 9,376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'미흡', '불량 판정 429건, 이 중 14건 사용금지 조치

* 정밀점검 56건, 정밀안전진단 28건, 보수보강 211건, 사용금지 14건 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기존 건축물 화재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표준공법, 시방서를 제시하고 예산확대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전문가 TF 구성운영,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, 정책 추진시 관련 부처 및 협회 등의 반대의견이 많았으나, 적극적인 협의와 대안마련으로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기존 ·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로 화재안전 대책 사각지대 해소, 내진보강 종합전략 마련하여 건축물 내진보강 체계 기틀 마련
3-3. 정책만족도	9.2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「시설물안전법」 전면개정·시행(18.1)을 통해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**고도화**(성능평가)하고, 시설물 관리를 **일원화**(국토부+행안부 → 국토부)
 - * 성능평가 : 기존 시설물 안전성 평가에 더해 내구성, 사용성까지 종합 평가
 - * 관리 일원화 : 기존 행안부 관리 시설물을 「시설물안전법」 내 ‘3종시설물’로 편입·관리
- 신규제도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, 시스템 마련 및 교육 실시
 - 「시설물안전법」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(18.1) 및 세부지침 고시(18.7)
 -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완료(18.12)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18.9~19.6) 구축
 - * 성능평가시스템 : SOC 성능평가·유지관리 결과 등의 이력을 관리하고, 이를 통해 구축된 Big-Data 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 등을 지원
 - **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: 시설물 전 생애이력(설계·시공·유지관리·철거)을 관리하도록 기존 FMS(1·2·3종 시설정보)을 고도화
 - 권역별 정책설명회(8회), 성능평가 워크숍(2회) 등 교육·홍보 실시
- 기존 관리대상 외 소규모 취약시설(경로당, 어린이집 등) **무상안전점검**(4,700개소) 및 **관리자 교육**(2만명) 실시
- 부실점검 업체 **현장점검**(90개소) 및 시설안전공단 **경영혁신방안** 수립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성능평가, 3종시설물 등 신규제도에 따른 의무사항 등이 본격적으로 '19년부터 이행됨에 따라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 필요
-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19.6 준공예정) 구축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서비스 적기 제공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75	SOC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완료 지연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신규 도입된 제도(성능평가, 3종시설물 등)의 조기정착을 위해 권역별 정책설명회, 워크숍 개최, 성능평가 대가기준에 대한 기재부 이건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, 안전점검 업체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점검 부실률 감소,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 점검 및 지속 교육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개선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내진보강 완료
 - 고속국도는 '17년 완료, 일반국도는 '3단계 내진보강대책'(2016년)에 따른 교량(6,910개)에 대하여 내진보강 완료
- 특수교 낙뢰사고예방을 위한 피뢰설비(16개소)보강 설계완료 및 공사 착수, 소방설비는 “특수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”을 마련
- 소형터널 안전을 위해 중규모(연장 500m) 이상 터널에 적합한 현행 방재지침을 개선하여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지침 마련
- 사고 발생시 30분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리구역 재편 및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(구축용역 '18.3~'19.6)
-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한 난이도 높은 실전형 반복 훈련(160회)을 통해, 사고 전 과정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
- 시설 노후화 선제적 대응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'도로관리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용역' 착수
- 특수교 및 터널에 대해 개별 관리사무소에서 지방청 중심으로 상황 대응 등 안전관리 능력 강화 추진

* CCTV·VMS 정보 지방청 교통센터로 연계, 특수교 및 터널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방청 관리감독 권한 강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가 관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내진보강은 완료 하였으나, 지자체 관리 교량의 내진보강이 50%수준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

* 지자체 내진보강 지원을 위해 2019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협의 하였으나 미반영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상도로를 지하화하는 소형차 전용 터널의 건설 필요성에 따라 의견 수렴을 통해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지침 제정 추진 및 일반국도 내진 보강에 대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조기 완료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일반국도 내진보강 조기완료 및 도로관리청의 터널 교육 · 훈련 실시로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과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능력 제고를 통해 국민 안전 증진 및 2차 사고 위험 차단에 기여

◆ 성과목표 4.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실현한다.

1

국토공간 품격향상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선진화·산업진흥

다소 미흡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생활 SOC 등 공공건축물 질적혁신을 주제로 국건위와 VIP 보고 대회를 개최(9.4)하고, 공공건축 품격향상 9대 과제 발표(10.4)
-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 회의(7회)를 거쳐 건축 기획업무 절차*를 마련하는 서비스법 개정(11.29 본회의 통과)
 - *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·자문 기능 신설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·운영 규정 등
- 설계발주제도 개선을 위해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및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(2.1 → 1억원 이상)하는 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(9월)
- 총괄·공공건축가 등 지역별 민간전문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 - * 도시재생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뉴딜사업 건축·경관 특화유형 신설
- 진흥정책 및 기반 마련을 위한 '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('19~'23) 수립
- 공공기관의 공공건축 담당자 대상 우수 공공건축 답사·세미나 등 교육 실시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총괄·공공건축가 제도의 전국적 확산 부족
 - 또한,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생활SOC 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통합·연계하는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필요성 지속 제기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총괄·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간환경전략계획의 '19년 시범사업 확대 및 장기적인 제도운영 도모 필요('19년 신규예산 15.28억원 확보)
-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률 제고를 위한 독려필요
 - * 생활 SOC 투자확대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건수 증가가 예상되므로 내실있는 운영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0	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 국건위 심의 지연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일반국민 대상 공공건축물의 인지도·만족도 조사, 관련업무자 인식조사, 산학연 전문가 TF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시 반영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40	공공건축 사전검토 실시건수 목표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공공건축사업의 기획절차 마련 및 사전검토 내실화를 통해 과대·과다 시설 방지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, 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산업 진흥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 의견수렴·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가 지원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('18.4.17)
- (우선관리지역 선별) 실효 전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원을 중심으로 **이용제한, 난개발**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
 - * '18.3. 공법적·물리적 제한 대상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, 지자체는 공원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'18.8. 최종선별(118km², 14조원)
- (지방채 이자지원) 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로 국비 직접지원이 어려우므로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는 간접지원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유도
- (제도개선) 공원부지 임차 허용(공원녹지법, '18.6.), GB 훼손지 복구대상에 미집행공원 포함(GB법, '18.4.), 장기미집행 지원근거 마련(국토계획법, '18.6.)
- (국고지원사업과 연계) 도시재생뉴딜, 생활공원 조성 등 국고지원사업 공모시 장기미집행시설이 포함된 경우 가점을 부여하여 연계 추진
- (실효대비 정부노력)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·제도 개선 등 정부차원 지원 노력

* (법률) 미집행시설 실시설계 실효제 도입, (제도) 해소 가이드라인 개정 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**현행 대책**의 지방채 이자지원, 국고사업연계 등 재정적 지원 외에도 국토부 내·외 재정지원 관련 **아이템** 지속 발굴 필요
- 우선관리지역임에도 재정투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·추진시 토지소유자의 반발 및 논의 과정에서 갈등 우려

☞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적합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5	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지연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 마련·시행을 위해 지자체 ·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율 등 충실히 대응, 미집행 공원 조성 등 지자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, 토지은행 활용 유도, 제도 개선 등 지원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에 대비 공원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실효 부작용에 대응하고 실효대상 공원의 조성 유도를 통한 시민 편익 증대 예상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관계기관 협업강화) 국방부, 외교부, 문화재청, 주한미군 등 관계기관과 부지반환, 문화재보호 등 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의
 - (문화재 보존)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근대건축물 보호 방안 마련·추진을 위해 '18.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·운영(4회)
 - (버스투어) 용산기지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직접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용산기지내 버스투어 시행(약 350명 참여)
 - (전시회) 서울시와 협력하여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디자인랩 운영('17.12~'18.5, 전쟁기념관), 전시회(11.30 개관) 개최, 소통공간 마련(12월)
- (이해관계자 협의)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, 서울시, 의원실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에 관한 사전공감대 형성
- (추진체계 개편)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개정 취지·방향성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특별법 개정(안) 마련('18.5월) 및 발의('18.11월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외교·안보 사안의 경우 美측과의 신중한 협의가 요구되고 미군측 기지이전이 지연되어, 속도감 있는 행사 추진이 다소 곤란
- 多부처(국방부·환경부·서울시 등) 연계사안의 경우 갈등·논란 등 정책 리스크 제거를 위한 입장 조율에 시간이 소요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관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관계를 유지하고,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버스투어 확대 운영, 시민소통공간 활성화 등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부지반환, 문화재 보호 등 현안에 대한 선제적 협의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지 내부 버스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, 디자인랩 운영, 전시회, 소통공간 마련 등을 통해 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법개정 추진, 기지 내부 버스투어 프로그램 운영, 소통공간 마련 등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사업 추진 기반 내실화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를 담은 「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」(안)(‘19~’23년) 마련(‘18.12)
 - * 산·학·연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·운영(‘18.6~) 등 민·관 공동 수립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(‘18.6~8), 우수 제안을 기본계획에 반영·포상(‘18.11) 등 기본계획의 저변 확대
- 신축 건축물 단열기준을 패시브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선진형 에너지성능 허가기준 본격 시행하고, 성능향상 지원제도 개선(‘18.9)
 - * 허가권자·설계자·건설사 대상별 수준 맞춤형 교육 실시(6·9월)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보조금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에 우선 지원토록 제도 개선(3월)
- 건물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대상 에너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 운영·관리 가이드 개발·보급
 - * 또한, 중소건물·가정 대상 맞춤형 에너지절약 온라인 매뉴얼 개발·홍보(‘18.12)
-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확산을 위해 신규 사업방식을 포함, 중장기 전략을 담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* 마련(‘18.12)
 - *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성능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간소화된 에너지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(6월)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·전문교육 시행(‘18.4)
-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의 신뢰도 향상 및 체계적·효율적인 DB 관리를 위해 에너지정보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‘18.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로에너지 인증제, 시범사업 및 R&D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, 민간 시장의 자발적 참여는 아직 부족한 실정
 - 민간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(리츠·채권 활용 등) 등 다양한 녹색건축 성공모델을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 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산학연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, 일반인·전문가 대상 설문, 협회·단체·지자체 등 간담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2차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·강화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규 도입 및 예산 증액, 표준모델 개발·보급 등 대응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,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(안) 마련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'17.11월 7개보 추가 개방 이후 수질, 물 흐름변화(유속·체류시간 등), 수생태, 지하수 영향, 하상 및 퇴적물 변화, 구조물 안전성 등 13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 실시('17.6월~)
- '4대강 조사평가단'을 구성(환경부, '18.7월말), 보 개방 영향 모니터링, 보 평가지표 및 처리방안 결정 방법 확정(12.24, 환경부)
- 관계기관 협업(환경부·부산시·수공 등)으로 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친수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하구 생태공간 조성 기반 마련

* 낙동강 하굿둑 운영 개선을 통한 해수유통 영향(염분, 환경 등) 검증 관계기관 공동연구('18.1~10) 및 낙동강 하굿둑 일대를 새로운 생태·문화공간으로 활용키 위한 공동연구 추진('18.2~12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물관리 일원화('18.6)로 보 개방 및 보 처리방안 마련을 환경부(4대강 조사평가단)가 주관(우리부는 협조)함에 따라, 과제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
- 4대강 보 중 한강·낙동강은 보 개방 상황이 소폭에 그치고 있어 보 처리방안 마련 지연 우려, 낙동강 하굿둑 조기 시범개방 요구(자문위원단, 환경단체 등)에 따라 실증실험(Pilot-test) 추진 필요성 제기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금강·영산강수계 보는 개방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처리방안을 마련 하고, 보 개방이 부진한 수계(한강·낙동강)는 개방 확대 및 모니터링 지속 추진 후 처리방안 마련 필요 *환경부 주관(우리부 협조)
- 낙동강 하굿둑은 인근 취수원과 농·어업, 해양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·평가 및 대책을 철저히 마련 후 실증실험 추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전문가와 시민단체, 법률가 등 민간으로만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, 유역별 민관협의체 운영, 공청회 등 일반국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보 개방 이후 물흐름 회복과 체류시간 감소로 조류 발생이 감소 효과를 확인,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여 모니터링 지속 추진 발판 마련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OSJD 가입) OSJD 신규회원 가입 규정 개정안 통과('18.3) 및 우리 정부의 OSJD 정회원 가입 성사('18.6)
- (동아시아 철도공동체) 양자 간 철도협력회의, 다자 간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각국에 공동체에 대해 설명하고 우호적 여건 조성
 - * 한-중 철도협력회의, 동방경제포럼, 국제교통포럼(ITF) 교통관리이사회(TMB), OSJD 정관개정을 위한 회의(ITRT 회의) 등을 통해 외교활동 전개
- (남북철도연결) 판문점 선언(4.27)에서 경의선, 동해선 철도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, 평양공동선언(9.19)에서 연내 착공식 개최 합의
 - * 경의선 MDL~개성(7.24), 동해선 MDL~금강산(7.20) 구간 점검 및 경의선 개성~신의주(11.30~12.5), 동해선 금강산~두만강(12.8~17) 현지공동조사 실시
 - 서울~평양~신의주 경제권역의 핵심축인 경의선 문산~도라산 전철화 사업 착공('18.9), 동해선 강릉~제진 구간 연결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
- (한반도 신경제구상 마련) 범정부 신경제구상 TF에 참여('17.12~) 하여 「한반도 신경제구상」 내 국토 인프라 협력계획 마련('18.8)
- (북방경제협력 로드맵 마련) 부처내 인프라·물류 작업반을 구성, 범정부 회의에 참여('17.12~)하여 「북방경제협력 로드맵」 마련('18.6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OSJD 가입 조기달성에 따라, 한국이 참여할 분과위원회 선택, 협정가입, 연회비 납부 등 후속조치 이행필요
- 대북제재 중이더라도 여건 조성시 원활한 남북 경험축진을 위해 남북 건설기준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‘15년부터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OSJD 가입, 동해선 남측 단절구간 연결 필요성 증대에 따라 예타면제 신청 등 적극 대응, 남북 철도·도로 착공식 행사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OSJD 정회원 자격으로 중국횡단철도(TCR)와 시베리아횡단철도(TSR) 등 철도사업 참여 기반 마련, 북한 철도 공동조사 착수 등을 계기로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
3-3. 정책만족도	9.10	

【전략목표Ⅱ】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.

◆ 성과목표 1.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·관리 제도를 개선한다.

1

청년·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지원 임대 공급 본격화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공공지원 민간임대) 시범사업(주거복지로드맵, '17.11)의 성과를 검증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본격 추진
- (제도개선) 초기임대료, 입주자격 제한 등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및 하위법령 개정 완료(7.17 시행)
- (청년 민간임대) 청년·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다각적 지원방안 수립
 - 무주택자 우선공급, 청년·신혼부부 특별공급(세대수의 20% 이상, 시세의 70~85%)을 통해 주거지원대상 입주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
- (부지확보) 택지공모, 민간제안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간 3.3만호(정비사업 0.7만호 포함) 및 청년주택 연간 24만실 본격 공급
 - * 정비사업 제외한 금년도 목표 2.6만호 중 '18.11월 기준 31개 사업장(21,608호) 부지확보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
 - * 지속적인 사업장 모니터링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 마련
- 주거지원계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필요
 - *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중소형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고, 기금 융자금리 추가 인하, 택지공모 시 10년 이상 임대 사업자에게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임대 유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간담회, 사업자 설명회, 아이디어 공모 등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,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등 여건변화에 적극적인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, 복합주거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및 민간임대시장 안정화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택지 확보)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(20건) 및 연평균 13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신규 후보지 발굴(33개)
 - 주거복지로드맵(17.11)에서 발표한 추진물량 외에도,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(9.21) 등 추가 발표를 통한 추가 부지 확보
 - * (9.21일, 1차 발표) 수도권 주택 30만호 추가공급을 위해 1차로 17곳, 3.5만호의 공공택지 발표 (12.19일, 2차 발표) 41곳, 15.5만호의 공공택지 발표
- (주택사업승인)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2만호 사업승인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사업승인 1만호 완료
 - * (행복주택 사업승인) 48개 지구 20,107호 사업승인으로 2018년 목표(2만호) 달성, (신혼희망타운)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시설 강화하여 15개지구 11,259호 사업승인
- (협의회 운영) 행복주택(임대주택)에 대한 지역주민, 지자체 반대 등으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민관 합동 위원회 심의를 추진
 -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이 적기 공급을 위하여 수시로 개최하여 당초 목표 4회를 초과하여 9회 개최함(225%)으로써 원활추진 도모
 - 특히, 갈등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 및 행복주택이 위치한 지자체(광역시, 기초) 105곳을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갈등 등 사전 예방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주택사업 계획을 수립(한국토지주택공사)은 지구선정, 설계착수 등으로 사업승인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 연중 분산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-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계획수립 시 1년단위를 2년단위로 변경하여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 추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구지정에 반대하는 지자체, 주민 등에 대해 수차례 면담 및 설득,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 방안 검토,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등 적극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대규모 공공주택(행복주택, 희망타운 포함) 건설 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주거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

◆ 성과목표 2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추진한다.

1

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

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공적주택 공급) 건설형·매입형·임차형 등의 공공임대 13.2만호, 공공지원 민간임대 4만호, 공공분양 1.8만호 등 공적주택 19만호 공급
- (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) 영구임대·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저소득 고령자가구 추가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(2.9)
 - 취약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우선 공급기준 마련 및 자녀 수에 따른 가점 확대(1.25), 주거약자용 주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(2.9)
 - * 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‘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’ 근거 마련(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 2.6)
 -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‘18.10~) 및 ‘18년 기준임대료 상향, 고령자 가구 편의시설 지원 금액(50만원) 추가(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, ‘18.7)
 - 마이홈센터를 확대 설치(‘18년 52곳) 및 고시원, 숙박업소,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 거주 가구에 대해 주거실태조사 실시(‘17.5~‘18.6)
 - 취약계층 지원대상 직접 발굴 강화,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, 절차 개선 등을 담은 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마련(‘18.9월)
- (신혼부부·청년지원) 신혼부부·청년 주거지원방안(‘18.7) 등을 통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계획 구체화
 - * 위례, 평택고덕을 선도지구로 추진 입주자 모집 실시(‘18.12), 위례에서 기공식을 개최하고 관계기관 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(‘18.11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신혼희망타운 장기임대 혼합공급에 따라 분양·임대 단지관리 어려움 및 갈등 소지로 혼합단지 관리 효율화, 입주민 화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주거복지 협의체, 간담회,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, 신혼희망타운 투기수요 진입 우려에 대해 전매제한, 거주기간 강화 등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'18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,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시행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, 신혼희망타운 공급, 신혼부부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
3-3. 정책만족도	9.1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주거비 지원) 주택도시시기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신혼부부·청년·서민층 주거비 경감 지원
 - 기존 주택구입·전세자금 대출 조건보다 대출한도, 금리조건 등 혜택을 추가하여 신혼부부 전용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상품('18.1.29.) 출시
 - 청년 월세대출 한도상향(월 30→40만원) 및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출시로 청년대출 지원대상 확대(25세→19세 이상, 2천만원 한도)
 -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(0.1%p~0.25%p)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기여
- (청년우대형 청약통장) 근로소득자 외 프리랜서, 1인 청년 창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출시(7.31.)
- (청약제도)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공정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(22건) 및 불법행위 단속(461건)
 - *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에 얹혀사는 동거인 등을 세대원에 포함시켜 청약자격 부여 등
 - 특별공급 청약 접수도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국민불편 개선('18.5.4)
 - 주요 과열단지에 대한 위장전입, 대리청약 등 불법행위 연중 수시 단속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책수혜자들의 혼선예방을 위해 他 신혼부부 지원정책과 동일한 신혼부부 기준(ex. 혼인 7년이내)으로 기금대출 지원정책 운영 검토 필요
- 청년 주거현실을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요건 개선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속적인 수요자 이용실적 모니터링,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의 등 적극적인 정책현장 대응을 통해 주거비 지원 강화, 청약제도 개선 등 성과 도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무주택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 자금 지원으로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 기대,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상품출시(7.31.) 후 4개월간 약 11만명이 가입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미래형 주택공급 확대) 전문가·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형평형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한 세부내용 구체화 및 고시 개정 추진
 - LH 공공주택에 특화된 스마트홈 표준모델을 적용할 시범단지 선정 및 경제성이 확보된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착공(4.20, 천안 두정)
 - 장수명 주택 기술적용이 유리한 원룸 및 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을 통한 장수명 주택 건설·보급 확대
- (공동주택 디자인 개선) 디자인 개선을 통한 창의적인 공동주택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·운영
- (공동주택 소비자 권익보호)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영업정지·벌점과 연계한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 시행
 - * 제도 신설 및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('18.3) 및 세부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('18.9)
- (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) 기존 주택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주택법 개정('18.8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장기적으로 주택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, 주택 시공 결함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입주자 불만이 집중되는 마감공종 품질 확보는 현재까지 역부족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제로에너지 주택 목표('25년)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절감기술 및 건축자재 등을 연구·개발 하여 단계적으로 에너지성능 강화 필요
- 선분양 제한 도입 등으로 주요 구조부 시공 결함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었으나 마감공종 품질 확보를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저에너지,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에 대한 업계 반발이 있었으나,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제시를 통해 상황변화에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을 보급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,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성 증진

◆ 성과목표 3.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.

1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주거종합계획 마련) '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(2013~2022) 수정계획 수립 및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(6.28)
- (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)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(8.28),
 - 관계부처와 함께 세제, 금융규제 개선,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(9.13)
 -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(30만호)를 추가 개발
 - 신혼희망타운(10만호)은 조기 공급을 추진하고, 도시규제 등 정비, 소규모 정비 활성화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(9.21)
- (분양제도 개선) 공공부문은 '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,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후분양제 활성화 유도(6.28)
 - 시장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가격 관리를 위하여, 기본형 건축비, 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 구성항목의 산정기준을 개선
 -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(12개→ 62개 항목)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(9.13),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(9.21)의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주택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대외 정기 공개하고 있으며, 언론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,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안 적극적 대응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 기여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8.2 대책, 9.13 대책 등 후속조치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, 지방 위축시장에 대해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운영 내실화, 미분양 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운영 등 맞춤형 대응 추진
3-3. 정책만족도	8.4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안전진단 정상화)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('18.3) 및 도시정비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'18.5)
- (재건축부담금 기반구축) 지자체의 업무혼선 최소화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 배포('18.3.2),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부담금 예정액 통지(5월~)
 - 서울지역 주요 20개 재건축단지에 대한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('18.1.19.)하여 거래시 부담금을 인지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안내
- (안정적 주택공급기반 마련) 정비사업 조합임원 및 시공사 등의 비리 행위를 방지하여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
 - 정비사업 계약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('18.2)
 -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시공권 박탈(과징금 부과) 등 처벌강화를 위해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('18.6, '18.10)
 -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·서울시 합동으로 5개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('18.8~9), 수사의뢰·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추진 예정
- (도심 내 주택공급) '주거복지로드맵(17.11)'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목표 중 정비사업 연계형을 통해 7,000호 공급부지 확보(12월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공공성 강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 및 한정된 정비구역 수로 인해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의 참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
 - 정비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재정착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방안 수립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공청회, 국회설명, 정책수요자와 토론회, 오보대응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상황대응으로 원활한 정책 추진 유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재건축부담금 제도 시행,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부동산산업 육성) 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정·시행('18.6.20)에 대비하여 위임사항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완료('18.6)하고,
 - 전문기관 연구,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5개년 기본계획 마련('18.12) 하고, 체계적인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추진
 - 최초로 실시되는 우수 인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인증요령」 제정('18.9), 심사 대행기관 지정('18.9, 감정원) 및 인증 실시('18.10)
 - 부동산업의 혁신적 스타트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던 차별적 지원 법령 개정하여 벤처기업법령('18.5), 창업지원법('18.11) 개정 완료
 - * (기존) 부동산업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→ (개선) 사행산업 등 업종만 제외
- (시장 질서) 자전거래, 업·다운계약 등을 방지하고, 실거래 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단속 강화를 위해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개정* 추진
 - * 신고기한 단축(60→30일), 해제신고 의무화, 허위계약 금지, 국토부 조사권한 신설, 관계 기관간 자료 공유 등 개정안 발의('18.4, '18.9)
 -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('18.8~10) 및 토지·단독주택·아파트 등 실거래 정보 공개를 확대 시행('18.10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금년 「벤처기업법령」 및 「창업지원법」이 개정되어 부동산산업이 투·융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,
 - 부동산업 창업·벤처기업은 조세 혜택, 각종 인력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함께 일선에서 실제 적용 필요
 - * 「여신금융법」, 「자본시장법」 등 차별적 제도가 여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분야별 전문가 ·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교환 및 자문,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에 관련 중소기업체에 대해 수수료 감면 등 추가 우대조치 발굴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우수사업자 인증 제도 도입, 다운계약방지 · 단속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민 편의 제고 및 시장질서 건전화 도모
3-3. 정책만족도	8.6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분양질서 확립) 건축물분양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'18.1)을 통해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
- (건축물 분양제도 개선)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 특성 및 분양신고 대상 확대 등 포함한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방안 마련('18.12)
- (개발업 신뢰도 제고) 개발업 등록·실적 관련 업무 위탁기관 관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 통보('18.1) 및 등록실태 점검 실시
- (개발업 등록 활성화) 지자체 개발업 및 인허가 담당자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시달('18.3) 및 지자체 간담회(2회, '18.6, 7월) 개최
- (개발업 전문성 확보) 개발업법 하위지침 3건을 개정('18.12)하여 전문인력 요건 및 인정 서류 간소화 등 절차·기준을 개선
 - 개발업체 공시정보 확대, 전문인력 인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('18.12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비주거 개발·분양시장은 시장논리가 우선되는 영역으로, 공적개입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적정 규제수준 도출이 매우 어려움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전문가·업계 의견수렴,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, 허위·과장광고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추진
- 개발업 등록업체 재무상태 및 개발실적 보고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절차 등을 마련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·신뢰도 제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수차례의 업계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분양 시장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, 업계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업 공시정보 정확성 제고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오피스텔(300실 이상)의 인터넷 청약율 의무화, 분양 광고 규정 강화 등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및 피해 방지

【전략목표Ⅲ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.

◆ 성과목표 1.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.

1

수도권 출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
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노동시간 단축 연착륙)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도출하여, 법 시행 이후 안정적 버스 운행수준 유지
- (광역버스 확대) 광역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M버스 운행제한 규정을 완화(30km ⇒ 50km)하였고(여객법 시행규칙 개정, '18.2월),
 - M버스도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5개 노선 신설, 47대 증차 완료
 - * '17년 29개 노선 / 395대 ⇒ '18년 34개 노선(5개 신설) / 442대
- (좌석예약제 확대) 출퇴근 시간 대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해 M버스 예약제 시행 노선도 확대('17년 시범사업 후 '18년 8개 노선 운영)
- (고속·시외버스) 거리제한 규제 완화하여 서울~세종 등 200km이하 노선*에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 및 운행('18.7)
 - * 200km 이하 노선 : 서울~세종(132.9km), 서울~유성(155.7km), 서울~연무대(165.2km)
- (CNG버스 도입 확대) CNG 버스 구매 지원, 광역버스 노선신설 및 차량 증차시 CNG 버스 우선 허용 등을 통해 CNG 버스 보급률 확대
 - * CNG 버스 보급률(시내 · 광역버스 기준) : '17년 77.9% ⇒ '18년 80.0%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노동시간 단축 연착륙)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('19.7월)에 대비, 운전인력 채용을 적극 확대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	광역급행버스 신규노선 사업자 선정 지연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 운행 감축 등 우려가 있었으나,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, 버스 운행수준도 기존 수준으로 유지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노동시간 단축 연착륙, 좌석예약제 확대, 광역버스 확대 등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교통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평창올림픽 지원) 열차 편성확대(日 26→51회), 임시(47회)·무정차 열차(16회) 운행 등을 통해 총 106.2만명 수송(일평균 2만명, 평시대비 157.6%)

* (임시열차) 클라이언트·해외 VIP 수송, 개·폐막식 심야수송 등 비정기수요 대응

- 패럴림픽대회 기간(3.9.~18.) 일평균 장애인석 3,825석 제공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·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

- (중장기 철도운영 전략) 고속화, 표준화, 연계성 강화, 고급화, 비용경쟁력 강화 및 외연확대 등 6대 과제를 토대로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

- 중장기 철도운영 전략에 연계하여 철도망 구축·차량수급·열차운행 계획 등을 조화롭게 추진

- (철도종사자 정규직화) 철도공사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6,769명*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기로 의결(8.24)

* 6,769명 ➡ ① 코레일 직고용 1,513명, ② 계열사 간접고용 5,256명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광역철도 운영개선) 급행열차 확대로 정차횟수가 감소하는 일부 역은 이용수요 변화·민원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운행조정 검토

※ 급행도입시 인근 특급·급행역 환승편의가 개선되도록 열차운행시간 旣조정

- (철도종사자 정규직화) 철도공사 직고용 등 참여한 노사간 갈등과 이견 등으로 합의안 도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, 상호 신뢰하고 화합된 노사관계를 정립·유지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운영기관, 전문가, 일반시민이용객 등 의견수렴 통해 광역철도 지연대책 마련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한 광역급행확대 시행 효과 분석 등 적극적인 정책현장 소통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평창 올림픽기간 중 차질없는 수송을 통해 올림픽 성공개최 지원, 광역철도 운영 개선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및 이동시간 단축 등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, 청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통한 철도서비스 및 안전 강화 기반 마련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경부선 전철 급행화*를 위한 대피선 설치공사 착공(7.20) 및 순환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안 마련(12월)

* 급행전철(現 34회) 20회 이상 증편운행, 급행 이용 시(용산~천안) 일반 대비 23분 절감 가능(일반 115분, 급행 92분)

- 삼성-동탄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을 추진하여 '18년 목표 공정을 초과 달성

* 서울시, 무역협회, 현대車, 철도공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 추진협의체 운영 ⇒ 적기개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마련, 사업구간 조정 등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수도권 전철 급행화 관련 이해관계자 이견조정에 필요한 절대시간 소요 등으로 성과달성에 애로 발생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삼성-동탄 광역철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

- 기존선 급행화 사업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추진한 사례가 없어, 그 필요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이견도 존재

* 급행화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경제성이 높은것으로 확인 되었으나,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예타 조사 등 관련 절차 지연

☞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지자체, 철도공단·공사 등 전문기관 연건 수렴,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 현장 소통 노력 및 분당선 급행화 사업에 대한 보완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신청 등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경부선, 분당선, 과천·일산선 급행화 등을 통한 운행횟수 증가, 이용·환승시간 단축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순환철도망 구축 추진을 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성 극대화 기대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A노선) 민간의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(5.1)하고, 협상 및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*하여 연말 착공(12.26)
- (B노선) '17.9월부터 추진중인 KDI 예비타당성조사의 중간점검을 통해 보완방안 마련 및 협의 중
- (C노선) 기재부, KDI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'16.1월부터 3년여 간 진행해 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, 타당성 확보(12.11, B/C 1.36)
- (신안산선)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지정(2.26)하고, 연말 실시협약 체결 완료(12.26)
- (소사~원시선 개통) 마무리 공사 등을 차질없이 관리하여 예정된 날짜에 적기 개통(6.16)하였고, '18.12월 현재 정상 운행 중
- (공항철도 T2역 개통)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(1.18) 前인 1.13일에 적기 개통하여, 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고
- (신분당선 미금역) 계획대로 4.28일 미금역을 개통하여 이용객의 분당선 환승 및 서울 도심 접근성 강화에 이바지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수도권광역급행철도) 공사 개시한 A노선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적기 개통하고, C노선은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추진
- (신안산선)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인만큼, 실시협약 체결 후 조속한 착공을 위해 실시설계 등 관련절차를 적극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안전성, 생활환경, 보상 등 주요 이슈별 전문가 자문회의, 사업자측 의견수렴, 주민 설명회, 공청회 등을 통해 현정소통 및 적기 대응, 신평시 교통대책 조기 수립을 위해 합동 워크숍 등 협업도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GTX 추진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통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, 공항철도 2터미널 연결에 따른 공항이용 편리성 제고

◆ 성과목표 2.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.

1

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의 추진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안전하고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자 자격유지점사 도입 및 승합택시 광역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개정
- 공공형 택시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
 - 국고보조금을 조기교부('18년 上)하고 사업추진 및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공공형택시 사례집 배포(9.28)하여 대규모 사업성과 달성
 - * '17년 100개 시·군(22.3만명) → '18년 126개 시·군(36.6만명) 수혜인원50%↑
- 농어촌 노선버스의 적자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'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(지침)' 마련(12.30)
 - 강원도 영월군 등 4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('18.10)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를 연구하여 '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
-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및 공공복리 기여를 위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(7.5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확산을 위해 대상지역을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(공공형택시 운영지침 개정)
 - 이를 통해 52시간제 등 도시지역의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효과 유도 가능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택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관련 대체방안 시행을 통해 업계 반발 최소화, 공공형택시 운영 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정책현장 적절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공형택시 수혜대상 인원 50% 증가, 실시지역 126개 지역으로 확대, 택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 도입 등 교통편의 증진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갈등조정) 지자체간 이견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* 운영, 주민요구사항 청취 및 반영 위해 지역(읍·면) 단위 설명회 개최

* (구성) 7개 지자체, 6개 중앙부처, (실적) 세종·청주 노선관련 이견조정('18.7.5)

-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설명회 참석기회 보장 및 의견청취를 위해 시 단위 설명회에 더하여 읍·면 단위 주민설명회를 추가 시행

* 타 고속도로사업(안성-구리 포함)은 시 단위 주민설명회만 시행, 세종-안성 사업은 국민 참여기회확대, 갈등 조기해소를 위해 읍·면단위 추가 시행

- (최적노선 선정) 타당성조사('09.8) 이후 장기간(8년) 사업지연으로 인한 변경된 현장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적노선* 선정

* '09년 대비 세종시 장군면 구간 시가화로 물리적 통과가 곤란하여 변경(8.5km, 봉안리 →송문리), 나머지 구간은 타당성조사 노선 준용, 충북 이용편의를 위해 오송지선 반영

- (실시설계 착수) '19.12월 공사 착공을 위하여 최적노선 선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용역 착수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현행법상 계획단계에서는 공개된 노선에 대한 행위제한이 불가하여 노선대 주변 난개발 등으로 보상비 증가 및 노선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으로 사업시행 지연 예상

- 사업의 원활한 추진, 보상비 절감, 이해 관계자간의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해 계획부터 사업시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간 이견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,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반영을 위한 지역(읍·면) 단위 설명회,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, '09년 타당성조사 이후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변경된 현장여건과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적 노선 선정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다양한 현장 소통 노력을 통해 '19.12월 착공, '24.12월 계통 예정인 신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SR 공공기관 지정) (주)SR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기재부 등과 지속협의, 공운위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완료('18.1)
 - 공공기관 지정 후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경영 평가·공시 및 고객 만족도조사 기반을 조성하고, 비정규직의 정규직화*('18.4~) 추진
 - *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(주)SR 비정규직 390명 정규직 전환 추진
- (철도산업 구조평가) 연구용역 시행*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** 구성·운영 등을 통해 철도산업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('18.12)
- (민자역사 국가귀속) 점용만료된 민자역사를 30년만에 최초로 국가귀속('18.1)하고, 정리기간을 제공해 소상공인 보호·피해 최소화
 - * 영등포역, 舊서울역에 종사하는 4,000여명에게 정리기간 제공, 사회적 혼란 최소화
- (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) 국가귀속한 민자역사(舊서울역) 내 공공시설 ('척척쿡쿡')을 구축('18.12)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(강소기업 육성) 연구원, 철도사업자 등과 협업을 통해, 실용화 지원이 필요한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38개*의 업체 지원('18.9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철도 구조개편) 코레일-SR 통합 여부 등 최적의 철도산업구조 대안설정을 위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
- (철도역 공공성 강화) 국가귀속 역사를 운영할 신규사업자 선정기준 및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허가조건 등을 마련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이해관계자·전문가 간담회, 정책토론회, 협의회 운영,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현장의 견을 수렴 및 정책 반영, 코레일-SR 통합 관련 갈등 최소화 노력, 국가귀속 민자역사 종사자 단기사용 허가로 영업활동 보장 등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SR을 공공기관 지정, 철도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 철도 공공성 강화로 국민편익 증진 기대, 국가귀속 민자역사 內 공공시설 설치 및 공적공간 개방 기반 조성
3-3. 정책만족도	9.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공공형 택시 연계) 31개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(100원 택시 등)를 철도역과 연계 운행하여 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*
 - * 산간벽지 마을 주민을 위한 '공공택시 철도연계 서비스' 도입
- (카셰어링 서비스 확대) 29개 역사에 카셰어링 전용면을 신규로 조성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촉진하고, 이용자 편의 제고
- (여행통합예약서비스) 철도 승차권 예매 시 렌터카, 카셰어링, 시티 투어 등 통합예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·운영
- (대중교통 및 환승센터 연계 강화) 국토부, 철도공사, 지자체 협업을 통해 오송역에 노선버스 통합정류장 구축을 합의하여 환승체계 강화('19년 완공)
 - * 철도공사 부지제공, 지자체 환승센터 및 안내시스템 구축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이해관계자 반발) 시범사업 추진 중 수요응답형(O2O) 서비스로 수요 이전을 우려하는 택시업계의 심한 반발이 발생
 - 지역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범사업 철회 및 확대 반대
 - ➡ 수요응답형(O2O) 서비스 도입은 택시업계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 검토하되, 사회적 여건 성숙 후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
- (성숙기반 미비) O2O 서비스 도입에 대해 렌터카 업체의 참여가 저조하고, 참여업체도 높은 요금을 책정하며 이용자 관심도*가 저하
 - ➡ 사회적 여건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요금수준 등에 대해 추후 민간 업체 등 협의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관계부처, 유관기관, 지자체, 유관업체 등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신규 연계교통 수단 활성화 방안 논의, 현장조사 및 토론회 개최, 시범사업 시행 및 이용자 인식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충실히 수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공형 택시 최종 31개역에 도입해 2,095명 이용(12.4기준) 이용객수 대폭 증가, 10개 역사에 각 3개씩 카셰어링 전용면을 조성·운영하여 월 평균 434건의 이용실적 총 1,739건(9~12월)의 이용실적
3-3. 정책만족도		9.0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김해신공항)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추진(12.말)
 - (기본계획수립) 지역에서 건의*한 활주로 배치, 소음·안전 문제 등 검토를 위하여 연장('18.8.→' 18.12.)하여 기본계획수립(안) 마련
 - * 11자 활주로 배치 등 소음대책마련 요구(김해시, '17.9, 경남도,'17.11)
 - (전략환경영향평가)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민 공람·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평가서 초안 마련
- (제주 제2공항) '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' 를 완료('18.6 ~ 12)하고,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('18.12 ~ '19.6)
 - (타당성재조사) 입지선정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전문기관이 '사전타당성 용역' 재조사(대안선정·입지평가 타당성 등) 실시('18.6 ~ '18.11)
 -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 예정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김해신공항) 공항 건설은 입지 선정 후 인근지역에 소음·안전 등 갈등(지역주민 피해) 발생우려가 크므로 지역과 상생 방안 마련 필요
- (제주 제2공항) 일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는 만큼, 지역 협의체, 범도민 추진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, 지역 정치권·주민 등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각종 간담회, 토론회,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조율 위해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어려운 여건에서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안 확정하고 제주2공항 입지타당성재조사를 완료하는 등 '18년 성과목표 모두 달성
3-3. 정책만족도	8.3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탑승교가 없는 군산·원주·사천공항은 공항공사에서 승·하기 시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 시 항공사에 대여 하는 방식으로 전 공항에서 승·하기 탑승편의 제공이 가능토록 개선
- 편의기준 근거마련을 위한 「항공사업법」 개정안 국회 발의('18.3)
 -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, 공항 및 기내에서의 필수 서비스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 포함
- 항공사·공항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「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(안)」 마련
 - * 장애로 인한 탑승거부 및 면책서약 금지, 교통약자 서비스 사전고지 및 간편 요청 시스템 마련, 승·하기 탑승편의 및 이동보조기기 위탁 도움제공, 교통약자 우대좌석 지정 및 대안적 의사소통수단 제공 등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항공사업법 개정 완료라는 도전적 목표를 세웠으나,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교통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법률안 통과 지연
 -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교통약자 편의기준 제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도 함께 지연
 - * 편의기준 및 보도자료는 기 완성되어 있으며, 개정안 국회 통과시 바로 배포 예정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향후 법안국회 개최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 설명 등 사전 조치 수행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8	항공사업법 개정 추진, 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제정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항공사, 공항 운영기관 대상 설명회 및 현장 의견 수렴, 장애인,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 의견수렴 회의 등을 통해 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국내 모든 공항에 장애인 승하기서비스 제공 및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 서비스 기준 수립 추진으로 항공서비스 선진화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

◆ 성과목표 3. 교통비를 절감하고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.

1

행정체계·교통요금 개편을 통한 교통 공공성 강화

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) 교통계획 수립, 갈등조정, 투자확대 등
광역교통 현안을 해결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
 - 기재부·행안부 등 관계기관, 지자체 등과 조직형태 및 예산권한 등을
협의하고, 이를 반영한 대도시권광역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
- * 조직형태 및 예산권한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내용을 담은 「대도시권
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('18.11.29)
- (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) 10% 할인된 월 44회 교통카드 정기권 도입,
도보·자전거 마일리지 20%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 설계('18.4월)
 - 3개 지자체*를 대상으로 교통카드 정기권 발행, 연계 도보·자전거
마일리지 시스템 정산·운영 등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시행
- * 세종특별자치시('18.4월, 4개월), 울산광역시·전주시('18.9월, 3개월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광역교통 행정체계 개편) 광역교통 현안 해결을 위한 대광위 조직
구성을 위해 인사·조직·예산·법령개정 등을 개정시기(3.19)에 맞춰 추진 필요
 - “대광위 준비단” 설립·운영을 통해 행안부·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,
대광위 조직설계, 인력·운영예산 확보, 법령개정 등 적극 추진
- (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)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자체 시범사업 효과 제고 필요
 - 울산·전주시 시범사업 종료 후 체험단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
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불편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, 개선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광역교통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행안부·기재부 등 기관간 입장차,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등을 적기 대응, 적극적 국회 대응으로 조직 설립 성과 조기 도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추진, 대도시교통광역청 설립 근거 마련 등 가시적 성과 있으나, 최종적 정책효과 도출단계에는 이르지 못함
3-3. 정책만족도	9.3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< 통행료 부담 경감 >

-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(2,9월), 평창 동계올림픽 인근 요금소 통행료 면제(2~3월),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6월)

* 설 588억원, 동계올림픽 110억원, 추석 618억원, AEBS 30%할인(40억원)

< 감면제도 개편 >

-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(6.12)
- 화물차의 고속도로 심야 이용시간에 대한 할인율 조정을 통한 할인 혜택 확대 및 할인기한 연장(1년)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(12.24)

<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 >

심야시간 이용비율	100~80%이상	80%미만~50%이상	50%미만~20%이상	20%미만
통행료 할인율(%)	50	30	20	0
↓				
심야시간 이용비율	100~70%이상	70%미만~20%이상	20%미만	
통행료 할인율(%)	50	30	0	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통행료 감면제도) 그간 성과검증, 제도개편 없이 확대 위주로 경직되게 운영하여, 일부 감면항목은 정책방향, 도입목적과 배치

⇒ 감면원칙을 마련, 정책방향 및 도입목적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, 필요시 단계적 감축·폐지 등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업계의 주간할인을 요구에 업계 및 전문가 간 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및 설득으로 절충안 마련 및 합의 도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감면제도 개편 및 명절·올림픽 기간 통행료 무료화,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고 예방 기여
3-3. 정책만족도	1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인천공항 T2 개장) T2의 개장(1.18), 평창올림픽 성공 지원
 - 평창올림픽 대회 참가 선수단, 운영진, 언론인, 관람객 등이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차질없이 입출국할 수 있도록 적기 개장
- (인천공항 4단계) 연 1억명 시대를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 추진
 - 계류장 건설 착공(6.22), 4활주로 건설 착공(11.1) 등 사업 조기 추진
- (공항복합도시개발) IBC-1 2단계 2차 상업시설 정상 오픈(9.23)
 - ⇒ 유희 부지 대규모 복합리조트(숙박·관광·위락시설 등)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(800명 신규), 공항지원 강화 및 신규 항공수요 창출
- (해외 공항사업)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공항 T4 운영권 수주(5.8), 터키·필리핀·말레이 수주 지원(3건), 페루 사업 신규 발굴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당초 예상 수요 대비 인천공항의 국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, 국제 경쟁력 및 여객편의 확보를 위해 지속 관리 필요

구 분	'16	'17	'18
예측수요(천명)	51,782	55,033	58,479
실제수요(천명)	57,152	61,520	67,676

- 또한,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공항개발·운영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 노력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인천공항 T2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, 개장 후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, 인천공항 단축도로 노선안에 대한 버스업계·연합회 의견 수렴, 해외 공항 사업관련 건설설업체, 공공기관 등 간담회 등 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인천공항 장래 여객 1억명 수용을 위한 4단계 사업 조기 착수, 제2터미널 적기 개상으로 평창 올림픽 성공개최 지원, 쿠웨이트 공항 4터미널 운영권 수주 성공 등 해외 공항 사업 수주지원 등 항공산업 활성화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고속철도망 확대) 고속철도 수요 충족을 위해 인천발·수원발 KTX, 호남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용역 착수
 - 고속철도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수도권 서·남부 및 호남지역의 KTX 이용 편의 제공 등 수혜지역 확대 기여
- (일반철도) KTX 운행노선인 경부·경전선(동대구~미전~진주) 및 전라선(익산~여수EXPO)에 고속화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착수('18.9)
 - * (용역기간) '18.8~'19.2, (연구진)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, (주)유신
 - 인덕원~동탄 복선전철 및 여주~원주 철도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설계 착수, 경전선(진주~광양) 전철화 및 장항선(신창~대야) 복선전철 설계 착수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평택~오송 2복선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('17.9~, 기재부/KDI) 완료 후, 기본계획을 발주('18.12)할 계획이었으나,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미완료
- 「일반철도 KTX 운행구간 고속화 사전타당성조사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, 2차례 유찰 후, 수행기관이 선정('18.8)되어 착수 지연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'18년 일부 지연과제*는 집중관리를 통해 '19년 상반기 완료 추진

* 평택~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발주, 일반철도 고속화 사전타당성조사 완료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8	호남고속철도 2단계 설계 발주 지연완료, 평택~오송 2복선화사업 기본계획 발주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관계부처 협의,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35	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기본계획 수립 1건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신규 간선철도망 확충 및 일관 수송체계 확립을 통해 이용개 편의 제공 및 철도 운영 효율성 향상 기대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도로환경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
 -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근거마련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('18.12) 및 설계기준 검증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추진('18.7월~) 등
 - 일반국도에도 졸음운전 예방 및 휴식공간 확대 등을 위한 졸음쉼터 설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'설치기준' 마련('18.12)
- 체계적인 도로운영관리방안 마련 체계 구축
 - 안전한 도로환경 확보를 위해, 도로보수원의 처우개선 방안마련, 인원 확충 및 표준작업복 규정 마련 등
 - 안전사고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최적 유지보수시기를 결정하는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('18.12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계획대로 과제를 달성했으나, 국민의 안전 및 편의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및 홍보 등 추진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,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·간담회 등 추진 필요
- 일반국도에 대한 '졸음쉼터 설치기준'이 마련되었으나, 기 설치된 졸음쉼터에 대해서도 기준에 부합토록 보수·개량 추진 예정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교통정온화 설계기준 검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가 TF를 구성·운영하고 일반 국민 대상 네이밍 공모 등을 통해 정책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교통정온화 기준 마련을 통해 운전자,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공, 일반국도 줄음선풀 기준마련, 고령운전자 등을 위한 도로 표지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 등 교통 사고 예방 효과 기대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일본, 대만 등 인접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항로 복선화에 합의하고 '18.5.24일부터 동남아 행 복선향로 운영·개시
 - 항공로 복선화를 통한 가용고도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 방면 항공기 지연 감소* 및 비행안전도 개선
 - * '17년(1~10월) 대비 '18년(1~10월) 항로혼잡 사유로 인한 국적항공사 지연 1.5% 감소
- 중국과 고위급 항로개선 워킹그룹을 운영, 서울에서 북경을 지나 몽골까지 1,700Km 구간을 복선화하여 '18.12.6일부터 운영
 - 항로 복선화로 항공기 분리간격을 현재 30~50마일에서 20마일로 축소하고, 유럽행 출발 제한도 현재 10분에서 6분으로 축소
 - * 항로 수용량이 약 25% 증가하여 시간당 25대로 증가하고, 인천공항의 유럽행 노선의 1시간 이상 장시간 지연이 50% 이상 감소 기대
- 한·중·일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항로의 지연, 혼잡완화를 위한 동북아 항공교통흐름협력회의 개최('18.3 서울, '18.11 북경)
 - 흐름관리 정보교환 플랫폼을 활용하여 3국간 항로 제한정보, 위험기상 등 익일 흐름관리계획서 사전 교환 등 실질적 지연 감소 조치 시행(7.31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미래 항공교통망 확충 및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항공기 정시성 확보 및 항공교통의 효율성,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
 - 중국, 일본 등 인접국과의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체계 뿐만 아니라 육·해·공군 등 내부 관계부처와의 지속 협력체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항로 복선화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, 복선화 방안 협의, 관제사·항공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소통 노력 및 관련국과 적극 협의·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동남아 행 복선항로 운영 개시, 인천-북경-몽골 구간을 복선화를 통해 동남아, 중국 등 혼잡항로 수용량 증대로 항공기 출발지연 감소 및 한중일 3국간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축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기여

◆ 성과목표 4.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.

1

교통사고 사망자 수 3,000명대로 줄이기

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종합대책 수립)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‘교통안전 종합대책’ 수립(1.23, 국무회의)
- (홍보·교육) 범부처·유관기관 T/F를 구성하여 2018년도 협업 홍보 방안을 마련(’ 18.3)하고, 새로운 제도 홍보 및 예방관리에 중점
 -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슬로건 선정 및 현장 홍보를 실시*하고, 연령별 흥미, 관심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로 대국민 소통 강화**
- *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(4.25),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(5.29), 보행자의날 교통안전 캠페인(11.9)
- ** 영화관(CGV) 캠페인 및 이벤트(9.21~10.20), 교통안전 이모티콘 배포(9.11월), 방송3사 및 종편 영상 캠페인(1,059회), 대국민 UCC 공모전(5월) 등
- (첨단안전장치) 대형 버스, 화물차를 대상으로 졸음운전 및 전방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추진(국비보조, 3월~)
 - * 대상 :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이상 특수·화물차 / 지원 : 장착비의 80%(상한 40만원)
- (특별교통대책 수립) 명절(설·추석 / 1·9월), 봄 행락철(4월), 하계휴가(7월), 고속도로 안전대책(12월) 등 취약 기간·부문별 안전대책 수립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사업 장착률이 다소 저조
 - 미장착 처벌(’ 20.1)까지 여유가 있어 운수업계에서 장착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나, ’ 19년에 수요가 늘어나며 완료 가능 판단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화물연합회 간담회 실시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이를 반영 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처리 지침 변경, 속도제한 하향 등 범부처 추진정책에 맞춰 매뉴얼 개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75	첨단안전장치 장착 보급률 일부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'02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*, '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2,000명대,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여건 조성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* '18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 9.8% 감소 (4,185→3,773명, △412)
3-3. 정책만족도	9.8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경사진 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개정안(민홍철 의원) 국회발의(1.25.) 및 상임위 수정가결(3.20.)
-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도입을 위한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 완료(3.21.) 및 검사기준 고시(5.15.)
-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신청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당초 계획(100개소)를 초과한 120개소 선정 후 점검 실시
- 설계단계 공동주택* 대상 교통안전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

* LH 행복주택 3개 단지(당진우강송산, 진천성석, 성남위례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필요
 - 공청회 개최를 통해 관계기관 및 시민의견 청취 후 보완 추진
-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화 검토 필요

*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아파트 단지 내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으로 국민적 관심 증대로 경찰청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통행방법 마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아파트 단지 등交通安全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, 아파트 단지 안전 점검 실시 등으로 안전도 제고 기대
3-3. 정책만족도	9.2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설계가이드 마련) 도시지역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도로설계 및 교통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한 가이드 마련
- (대기질 관리방안 마련) 실제 터널 내 대기질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터널대기질 관리방안 마련
 - * 터널 내 오염물질 농도의 현장측정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
- (내진설계기준 개정)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 사항*을 교량 및 터널내진설계기준에 반영
 - * 내진등급, 지진하중산정방식(설계응답스펙트럼), 지반분류체계 등
- (규칙 개정안 마련)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적용가능도로, 적용시간, 설치폭, 비상주차대 설치 등의 기준 제시
 - * 위험구간 정차배제, 비상차량 및 불법주행차량의 위험구간에 대한 경각심 유도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당초 성과목표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대기질 관리방안은 마련하였으나 세부설계를 위해 보완 필요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세부설계기준 마련) 도시지역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설계 가이드를 마련하였으나 세부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보완 필요
- (대기질 관리지침 마련) 향후 터널 대기질을 포함한 터널환기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 마련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	교량설계기준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심의 지연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업계·전문가 참여 공청회 개최, 설문조사 및 지자체 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8.85	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도시지역에 특화된 도로 건설 가이드 제공으로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로건설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 및 터널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철도안전법령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('18.6, ' 18.12)
 -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제 도입 및 안전투자 공시제 의무화
-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제도 개선 추진('18.3)
 - 철도차량 운행선로 작업 시에 운행안전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의무화하여 작업자 안전 확보
 -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자격수준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, 철도사고 유발 및 업무 부실 시 자격취소정지
- 안전한 철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「철도사상자 감소대책 마련」('18.8)
 -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 소홀 뿐만 아니라, 공중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사상자 감소대책 필요
-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, 종합훈련을 통한 비상대응 역량 강화('18.8)
 - 철도현장의 재난대응 매뉴얼 중복성을 제거하고, 경전철 등 철도 운영자와 지자체의 매뉴얼 보유 적정성 확보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강릉선 KTX 탈선사고, 오송역 단전사고 등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
- 현장종사자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, 승객보호를 포함한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등 「철도안전 강화대책」 마련을 통한 종사자 이행력 강화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「철도사고 사상자 감소대책」 등 정책 수립 전에 간담회, T/F구성·운영,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적극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, 정책 집행과정에서도 운영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점검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철도사고 사망자 수(운행거리 1억km당) 17.9명으로 전년 동기(19.4명) 대비 7.7%↓, '18.11월 기준 작업자(직원) 사망자수는 1명으로 전년동기(4명) 대비 3명↓
3-3. 정책만족도	8.8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신호시스템 국산화) 한국형 신호시스템을 개발하여 성능·안전성 인증을 완료('18.6)하고,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* 계획수립('18.7)

* (도시철도용) 일산선, 193억원, '18~'21, (고속철도용) 전라선, 380억원, '18~'21

- (인증인프라 구축) 철도차량의 주행시험 및 시설의 현장부설시험이 가능하도록 충북 청원~세종시에 13km의 시험선로를 구축('12.31)

* (사업개요) 연장 13km / 사업비 2,399억원 / 사업기간 '14.9 ~ '18.12

- (첨단기술 도입) LTE-R의 원주-강릉선 적용('17.12)을 토대로 전국 확대계획을 수립('18.5)하고, 호남·경부선 등 주요노선 적용* 추진

* 총 사업비 1.1조원 : ('18) 344억, ('19~'20) 4,389억, ('21~'22) 3,133억 ('23~'27) 3,333억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신호시스템은 열차운행 안전과 밀접하여 엄격한 성능과 안전성이 요구되어,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인증인프라 구축을 추진이나,
 - 시범사업 이후 적용할 경우 신호시스템 국산화 및 산업활성화의 정책목표가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어 개선대책 마련 필요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운행선의 경우 신규개발 시스템 적용은 어려우나, 신규 건설노선은 작업 및 설치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므로, 신규노선 적용방안 검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관계기관 협의체 운영, 철도운영기관·제작사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신호시스템 국산화를 통해 철도산업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, 열차운행 자동화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 요인 감소로 운행 안전성 강화, 전용 시험선로 등 인증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험시간 단축 등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지진·폭설 등 재난에 대비한 대응 대책 추진 및 안전체계 마련

- 전국공항 시설물 내진성능평가(95개소) 및 보강사업(8개소) 완료, 폭설 대비 장비·인력 확충*을 통해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공항 체계 구축

* (장비) 김포·제주 등 7개 공항 15개 장비 보강 / (인력) 제설인력 6명 증원

- 또한,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용역 시행*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강화된 기준 마련·고시('18.12월)

* (기간) '18.4월~10월(7개월) / (기관) 사단법인 한국항행학회 / 단국대

○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실효성 확보

- 활주로·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신설 등 「공항시설법」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 개정·시행('18.6.27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○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효과 발생을 위한 홍보 한계

- 재난에 대비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고,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및 업무관계자(공항시설 관계자) 대상의 홍보 어려움이 있어 높은 정책효과 발생정도 점수('우수')를 받지 못함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안전관리 기준 및 정책 수립시 적극적인 홍보 강화 필요

- 계획수립 초기 예상한 정책효과가 명확히 발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완료시 적극적인 홍보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안전관리 기준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,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용역 보고회, 국가기준센터 심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진행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공항내 주요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및 제설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재난 발생시 국민 생명 보호 및 구가 기반시설에 대한 기능 유지 체계 확립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테마점검) 승무원 비행근무시간('18.2~3), 해외 신규 취항공항('18.9), 신기종(B737-8, 이스타) 도입대비 훈련·안전지표 취약 社 점검('18.11)
- (종합안전점검) LCC* 안전운항체계 종합점검 실시, 조직·기능 확대, 시설·장비 확보 등 내적 성장에 따른 과감한 안전투자 유도
 - * 25대 도달 항공사 진에어(3.12~23), 에어부산(11.29~12.9)
- (조종사 피로관리) 조종사 피로로 인한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조종사 피로관리기준을 개선*·강화 시행
 - * 휴식 증가(최소휴식 8→10시간/1일, 연속7일에 24→30시간), 예측불가상황시 승무시간연장 단축(2→1시간), 휴식시설등급 및 시차반영 신설.
- (우주방사선) 항공사 사용 피폭량 평가 프로그램의 신뢰성(측정값 차이)과 정보 제공방식(개별요청 시)에 문제를 제기(언론, 국회) 하여 해소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조종사 피로관리기준 개선을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,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이 개정('18.5)됨에 따라 노사간 기 합의된 피로관리기준(안)에 대해 勞측에서 추가로 변경할 것을 요구
 - 기 합의된 피로관리기준(안)에 대하여 노사간 추가 협의를 진행·재합의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차질 발생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침 결정('18.12)
- 입법예고·규제심사('19.1~2월), 법제처심사 및 공포·시행('19.3월)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3	승무원 피로관리관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, 고시 개정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항공사 간담회, 업계·학계 등 참여 세미나, 정책 토론회,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종사 피로 관리, 안전점검,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등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1	항공안전법 시행규칙, 고시개정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'13년 이후 국적항공사 무사망사고 5년 연속 유지, 남북 하늘길 재개로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, LCC의 성장에 따른 종합안전점검으로 안전수준 향상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All-In-One 보안검색장비 개발) 항공보안장비 R&D 사업('13년~'18년)을 통해 국산 통합형 검색장비 개발 완료, 유럽(ECAC) 인증시험 신청 및 시험기관(네덜란드 TNO)에 발송
- (생체정보 활용 신원확인) 국내선 출발 승객 신원확인을 신분증 대신 생체인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 시행(김포-제주, 1.29~) 및 확대 운영(김해·대구·청주, 12월)
- (셀프수하물처리 확대 시행) 항공사 직원이 발행하던 위탁수하물 꼬리표(tag)를 승객이 직접 발급·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 추가설치, 기능개선을 통해 있도록 승객편의 향상
- (제주국제공항 스마트항공보안 도입) 첨단 항공보안장비(CT엑스레이 등) 도입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첨단화·고도화된 위해물품을 사전 제거하여 승객불편 개선 및 항공보안 확보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(All-In-One 보안검색장비 인증시험 중단) 개발 완료한 보안검색장비에 대해 인증시험 신청('18.2)하여 유럽민간항공위원회(ECAC) 시험평가 진행 중,
- 예기하지 못한 사업기관의 법정관리로 인해 연구가 일시 중단되어 시험평가를 완료하지 못함

* All-In-One 보안검색장비 개발 성과지표 측정방법은 유럽 ECAC 성능인증 시험평가 실적으로 측정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All-In-One 보안검색장비 인증시험 재개) 관계기관,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기관을 재선정('18.12.28)함에 따라 시험평가를 재추진하고, 향후 개발된 보안검색장비의 국내외 시장진출 위해 유럽인증 획득지원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5	보안검색장비 유럽 ECAC 인증시험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탑승수속 자동화(키오스크) 서비스 확대, 헬프 수하물 서비스 확대 등 추진과정에서 적극 홍보 등 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8	All-In-One 보안검색장비 개발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생체정보 활용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(5개 공항), 셀프 수하물 처리 확대 등을 통해 항공보안은 강화하고 승객 대기시간 감소 등 공항 이용편의 증진

【전략목표Ⅳ】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.

◆ 성과목표 1.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.

1

지속가능한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(일자리 로드맵 발표, 5.16) 제6차 일자리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, 최초로 부처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망라한 일자리 로드맵 발표

-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실국의 기존 정책들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* 하고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**을 위한 노력

* 도시재생 로드맵 수립시 마을관리 협동조합, 어울림 플랫폼 등을 일자리 과제로 설정

**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팅 센터, 공간드림센터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

○ (일자리 창출 성과) 정기적인 로드맵 추진실적 점검과 미흡과제 보완 등을 통해 로드맵 시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중

- 특히, 희망상가* 등은 창업희망자의 높은 관심과 함께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, 항공 MRO** 등 양질의 일자리도 다량 창출

* 임대주택 단지 내 신규공급 상가의 60~80% 수준을 청년·사회적기업·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(시세의 50~80%)

** 항공기 추가도입(5년간 138대), 항공정비 해외의존도 감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, 항공정비인력을 교육하고 양성된 인력이 바로 채용될 수 있는 여건 마련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목표달성도, 관련계획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하여 목표를 수정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로드맵 보완 및 실적 지속 관리('19년)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일자리 로드맵 과제발굴과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특성화고 방문, 일자리 토크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현장소통 선행, 국토교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전략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임대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우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 희망상가 등 창업공간 273개 제공, 선호도가 높은 공공부문 새일자리, 나눔 일자리 및 비정규직 전환으로 1.1만개 일자리 창출로 고용문제 해소
3-3. 정책만족도	8.6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조종인력) 항공사의 적극 참여유도를 통해 ‘18년 목표(200명) 대비 10%를 초과한 220명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
- (정비인력) 항공사 등에서는 ‘18년 채용 목표(800명) 대비 13%를 초과한 910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
- ☞ 항공사는 안정적인 조종사 수급을 위해 先선발 제도를 ‘19년도에 확대*할 계획이며,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공평한 직업 선택의 기회**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* (항공사 先선발) ‘18년 217명(중간실적) → ‘19년 240명(계획)

(항공장학재단 운영 계획) ‘19년 약 30명, 20억 → ‘20년 약 40명, 30억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조종) 先선발 後교육으로 양성된 인력의 품질향상 및 안전제고를 위해 훈련기관별로 일부상이한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의 표준화 필요
- (정비) 항공사 맞춤형 과정(B737)의 수료자에 대한 항공사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'19년에는 A320 기종 과정도 개설 추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항공사-훈련기관 등 관계자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실시, 일부 항공사에서 선선발제도 운영의 체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해 운영체계 개선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先선발 後교육 선발인원 확대, 맞춤형 정비과정 교육 등으로 조종·정비인력 채용 증가,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공평한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3-3. 정책만족도		9.0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개인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·매력도 향상 및 고비용 구조의 공모·상장 규제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(9.28, 리츠 공모·상장 활성화 방안)
- 연기금의 공모 면제요건을 축소(투자비율 30 → 50% 이상)하여 공모 유인 확대(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개정안 시행, 11.15)
 -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존 사모 투자자 요건 확대(전문투자자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(사모 제외), 특정금전 운용 신탁업자 추가)
- 대형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 등의 자산관리회사(AMC)를 신규 인가하여 리츠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자산 공급 확대 유도
 - * '18년 AMC 신규인가(5개사) : 엠디엠투자운용(2월), 이지스자산운용(6월), NH농협리츠운용(6월), 한국리테일투자운용(7월), 미래에셋자산운용(8월)
-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리츠 신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'리츠 신용평가제'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
 - * '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 연구' (한국금융학회, '18.7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리츠 공모·상장 추진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, 여전히 사모 위주의 투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, 공모·상장에 대해 리츠 참여자의 의지 부족
- ⇒ 공모·상장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리츠투자포럼 세미나 개최, 업계·학계·전문가 등과 7차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,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리츠·부동산펀드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제외 유지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리츠 관련 규제개선 등 노력으로 상장리츠의 규모 확대 * 상장리츠수 / 시총규모 - ('17) 4개 / 0.11조원 → ('18.7) 6개 / 0.62조원, 443% ↑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‘표본조사 운영가이드 라인’ 마련
 -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및 모집단 변동을 적시 반영할 수 있는 표본조사 운영사항 체계화·구체화
-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영어과목 점수기준 마련
 - ‘창업규제혁신방안’ 과제로 선정되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요건 완화
 - *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10.24.)에서 창업규제혁신방안으로 선정
-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평가업자 선정
 - ‘18년도 추천실적은 3,710건으로 전년대비 실적* 약 37% 이상 증가
 - * ‘18.12월 기준 37.3% 증가(‘17년도 실적 2,700건, ‘18년도 실적 3,710건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안의 실행을 위해 세부과제별로 이행준비과정 중에 있음(※ ‘감정평가 표본조사 운영 가이드라인’은 기마련하여 시행중)
 - 관련 「감칙」은 전문적인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, 징계공시는 법 개정 사항으로 이해당사자와 공감대 형성과정 중임(※ ‘18.11월 감정평가협회 국회 기자회견 발표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연구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 추진 필요
- 또한, 감정평가사 시험에 진입장벽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개선안도 강구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수료 개선방안 논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청각장애인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요건 완화, 감정평가업자 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평가업자 선정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국제협력)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(11.7~9, 방콕, 2차관)하여 한-ASEAN 교통 협력 로드맵*('18~'22) 등을 포함한 장관 선언문 채택,
 - * 아세안 공무원 초청연수 등 역량강화, 마스터플랜수립, 타당성조사, 연구용역 등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개 교통협력사업
- (해외수주지원)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(11.7~9, 방콕, 2차관)계기 태국 교통부 장관 양자면담 등을 통해 철도 등 교통관련 사업* 수주 지원
 - * 태국 북부 동서횡단철도, 푸켓 공항- 시내 트램건설 사업 등
- 한-아세안 교통협력 포럼기간 중 비즈니스미팅(4.26)을 마련하여 아세안 회원국과 32개 국내기업을 매칭,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- (위상강화) APEC 교통실무그룹 의장직(국제협력통상담당관, '18년~'19년)에 진출, 제45차 교통실무그룹회의(4.23-24) 개최*를 통해 의장국으로서 리더쉽을 발휘, 아국 위상 및 회원국과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
 - * APEC 19개 회원국 교통정책 담당자(국·과장급) 179명 참석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ASEM·G20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주거, 교통, 에너지 등 폭넓은 의제에 대응하여 네트워크를 확대 하였으나,
 - 다자·양자 협정을 통한 우리 산업 해외진출, 구체적 해외 사업 수주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부재하여 시너지 창출에 다소 미흡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정책 효과 달성도 및 시너지 창출을 확충하기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토교통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한.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 따라 교통 및 인프라 분야 다자간 국제회의 활용 추진, 장관관급 국제회의, 국제행사에서 국제이슈 논의를 주도하고, 우리기술 정책을 홍보하는 등 수주지원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아세안과 교통.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, 장관회의.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, APEC 교통실무그룹 의장직 진출 등을 리더십 발휘 및 아국의 위상 강화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항공회담) 싱가포르, 우즈벡, 라트비아 운수권 증대를 통한 국적사 운항 기반 마련, UAE와의 상호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한 국익 보호
 - * (한-우즈벡) 운수권 확대(주8회→주10회)로 신북방정책 추진 지원, 이용자 편의 증진 및 국적사 운항여건을 개선
 - (한-라트비아) 양국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한 정기편 운항기반 마련, 여행객 편의 향상 및 교역활성화 기대
- (EU·ASEAN) EU 집행위원회 면담, ASEAN 예비협의 등을 통해 거대블록 경제권과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
 - 한-EU집행위 사전면담(4.3)을 통해 항공분야 수평적 협정* 체결 추진을 본격 개시했으며 협정에 가서명(10.12)
- (실무회의) 사드 이후 단절되었던 한-중 항공당국 회의를 재개하여 양국 입장을 확인하고 차기 항공회담을 통한 성과도출 기반 마련
 - 사드 사태로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던 항공운송당국 간 공식 채널(국장급)을 2년 9개월만에 재가동하여 관계복원의 초석 마련
- (ICAO 활동) ICAO와 공동으로 『ICAO 법률세미나』의 성공적인 개최(5.24-25, 인천), 국제항공법 분야 항공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복수항공사 취항기반 마련을 위해 연내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추진했으나, 몽골측 내부사정에 따라 2019년으로 순연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몽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항공회담 개최에 차질없는 대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항공사, 공항공사 의견수렴을 통한 항공회담 준비, 전문가 의견수렴, 공청회 및 공정위 의견 등을 기반으로 제휴협정 인가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항공회담을 통해 3개국 운수권 확대, 국적사 최초의 제휴 협정 인가를 통해 신규 노선 취항 등 시장 경쟁력 강화 기여, ICAO 법률세미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위상 강화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소형비행기 기술기준) 성능에 기반한 소형비행기 기술기준(고시)을 마련하여 개정('18.1), 국내업체가 안전성 입증 시 손쉽게 활용 가능한 산업규격 안내서 마련·배포('18.9)
- (제한형식증명) 산불진화 등 특정임무용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제도 도입 관련 항공안전법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) 개정('18.6), 이에 따른 제한형식증명 발급을 위한 세부 기술기준(고시) 마련('18.7)
- (항공기 복합재료 인증) 항공기 복합재료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계획(안) 마련('18.6),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복합재료 인증기준, 절차, 방법 등 복합재료 인증기준(지침) 제정('18.11)
 - * 복합재료 검사업무규정, 복합재료인증 시험평가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등
- (항공기 부품인증 등) 국책사업으로 개발중인 민·군 겸용 헬기의 핵심 구성품 인증을 위한 개발업체 제작 합치성 평가수행('18.12), 향후 유럽 등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한·EASA 간 업무약정 협의('18.7) 등
 - * 유럽 에어버스 원형헬기(EC155B1) 기반으로 국산 개발 구성품 62종 장착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국산화 헬기부품에 대한 부가형식증명 신청자의 부품개발 지연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민수헬기 개발이 차질 없도록 부품인증 형식증명위원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
 - 헬기 부품의 도면·규격서 승인 및 구성품 품질관리의 적절성 여부 확인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7	헬기개발부품 제작 합치성 평가, 부품인증 형식 증명위원회 개최 등 지연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민군 겸용헬기 개발 인증과정에서 전문감시기관, 신청자와 주기적 회의, 유럽과 인증분야 업무약정 협의, 제작사·헬기업체 대상 의견 수렴 등 현장 소통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민군겸용헬기 개발 국책사업 관련 주요부품의 차질없는 인증 추진, 한·유럽간 인증분야 업무약정 체결 추진 등을 통해 국내 헬기 제작 산업 활성화 지원

◆ 성과목표 2. 생활공간 속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.

1

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추진

매우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국가지범도시, 세종·부산)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조성
 - ⇒ MP·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관계부처·전문가 협의·검토를 거쳐,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(' 18.7)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 수립(' 18.12)
- (기존도시 스마트화) 빅데이터·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·실증(R&D)과 함께,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접목·확산
- 시범도시 내 신산업(자율차·드론 등) 육성과 개인정보 관련 각종 특례 및 혁신성장진흥구역* 도입 등 「스마트도시법」 개정 완료(7.26)
 - * 용적률·건폐율 완화 등 입지상 규제와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인허가의제 등 규정
-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국제행사인 「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」의 성공적인 개최(' 18.9월)로 기업투자 활성화 도모
 - 해외 수출 계약체결 775억원(전년대비 2.6배↑) 및 해외바이어 상담액 4,600억원(전년대비 3.8배↑), 스타트업 투자의향 접수 171억 등 성과
-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을 통한 우수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
 -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(동아시아 정상회의, 싱가포르/ 11.11~15) 시 타국 대비 우수 전시(세종·부산 시범도시)로 성공적 홍보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수립 및 국가 시범도시 추진 초기 단계로, 성과 가시화와 함께 혁신 생태계 조성, 일자리 창출 등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, 민간기업의 관심증대에 따라 각종 간담회, 사업설명회 등 실시,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개선 필요성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국회 대응을 통해 조기개정 완료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스마트시티 규제개선을 위한 법개정 완료,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, 기존도시 스마트시티화,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다양한 모델의 사업 발굴, 월드스마트 시티 성공적 개최로 우수기업 해외진출 지원
3-3. 정책만족도		9.0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2차례 정책발표*를 통해 '20년 자율차 상용화, '22년 완전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·제도 정비 및 정책추진 로드맵 발표
 - * 「자율차 규제혁신 방안」(1.22), 「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」(2.2)
- 테스트베드 K-City 준공·개방(12.10), 데이터 공유 협의체 발족 및 공유센터 운영(12.14, 21개 기관) 등 기술개발 지원 성과 가시화
 - 자율차 60대 운행허가*(누적) 및 운행거리 48만km 달성('17년 30대 19만km)
 - * 중소기업(4개社)·해외업체(1개社) 진입, 버스(4대)·트럭(2대) 허가 등 다변화
- 스마트도로 시범구축(대전~세종 88km)을 완료하고,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(85km), 서울(121km), 제주도(300km) 등 확대('18~'20)
 - 정밀도로지도 1,741km(경부선 등)를 구축, 4백여개 기업 등 무료제공
- 상용화를 위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(안)을 마련하여 제도화 준비
 - 상용화 촉진·지원을 위해 복잡한 규제를 면제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「자율차법」 발의(10.26, 윤관석 의원)
- 평창 수소자율차 시승(2~3월), 5G 자율차 시연(2.5), 서울도심 시승행사(6.17), 자율차 카셰어링 시승(11.7) 등 국민 체감기회 확대
 - 다양한 시연·시승행사를 통해 일반국민 약 1,300명이 자율차 직접 체험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데이터 공유협의체 지원, 스마트도로 시범사업구간 개방 등을 통한 대·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 지원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미 우버사의 자율차 사고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해 대국민 체험행사, 안전성 확인 강화 등을 통해 긍정적 인식 제고, 간담회·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자율차 테스트베드·인프라 구축, 기업간 연계·협력 촉진(협의회 운영)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, 투자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
3-3. 정책만족도	9.3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시범·실증 지원) 시범공역 확대, 특별비행 승인제 검토기간 단축, 긴급 드론 특례확대,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등 추진
 - 공항 안전 및 군 안보 등으로 지정이 어려웠던 시범공역을 수도권 지역 포함 3개소 추가하여 총 10개소 선정('18.6)
 - * (기존) 강원 영월, 충북 보은, 경남 고성, 전남 고흥, 전북 전주, 대구 달성, 부산 영도 (추가) 경기 화성, 전남 광양, 제주 서귀포
- (규제혁신) 드론 운영범위 확대 및 성능 고도화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*으로 고도화하는 등 마음껏 날릴 수 있도록 규제 개선('18.6)
 - * 완구류·저위험·중위험·고성능군으로 분류하여 비행승인·조종자격 등 차등 적용
 - 특별비행승인*제 검토기간 단축(現 90→30일), 재해·재난 시 긴급드론 운영 공공기관 확대(1→23개) 및 승인절차 합리화
 - * 선진국 수준의 고도·속도 제한, 장기 비행승인허가제 도입(6개월), 비가시권·야간 특별비행승인제 도입, 비행승인·촬영허가 Onestop 민원시스템 제공 등
- (인프라구축) 비행시험장 설치허가('18.7), 실시계획 승인('18.11)을 거쳐 통제센터 공사 착수('18.11), 드론 전용비행시험장도 구축 공사착수('18.5)
 - (실기시험장) 드론 자격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도권실기시험장에 대해 구축 방안 마련과 예산도 확보('18.12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체계적·종합적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육성법('18.6, 국회발의)에 대해 산·학·연에서는 시급한 입법 요구 중으로 하위법령 정비까지 정상추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해 드론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, 고도기준 등 언론 지적대응 또는 추가 정책을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규제제도 개선, 인프라 구축, 창업지원, 실증·시범사업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드론 운영시장은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속도로 성장
3-3. 정책만족도	9.1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공공선도형 시장창출) 국가기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 **공공분야** 대상 수요 4,000대* 발굴·관리(누적 : '17.9월 300→'18.5월 900→'21년 4,000대)

* 국토부 856대, 경찰청 1,180대 및 해수부 410대 등(산하 공공기관 등 포함)

- (민관협업체 운용) 공공 수요처, 제작업체,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업체를 다수 개최하여 **공역·자격·인증** 등 제도개선과 투자, 기술개발 논의

- 수도권 內 테스트공역 확보('18.6), 위험도·성능기반 드론 분류체계 개선('18.9 방안마련) 및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개발(R&D)에 민간* 참여

* KT, 유콘시스템, 메타빌드, 다보E&C, 블루젠 등

- (긴급드론 운영 확대) 재해·재난 시 긴급 드론 운영기관 확대(1→23개, '18.6) 및 긴급비행 시 유선통보 후 비행 가능토록 승인절차 합리화(11.22 시행)

-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특별승인을 받는 경우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비행승인절차도 개선('18.8 국회발의)

- 공공수요 발굴 및 수요-공급자간 정보공유를 위한 다양한 행사*도 개최

* 규제혁신 해커톤(4.3~4.4), 드론 심포지엄(6.5), 드론붐업주간 선정·운영(10.1~14, 국가기관 등 16개), 안전정책 토론회(10.2), 드론 교통체계 국제컨퍼런스(10.12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업계·수요처·학계 등과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긴급드론운영 공공기관 확대를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조속한 정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토론회, 간담회, 업계, 사용자 등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수렴 및 정책 반영, 정책의 수립, 집행, 사후평가 등의 단계에서에서 적극적 홍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공선도형 시장창출 및 긴급운영 확대를 통해 국내 드론 운영시장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성장
3-3. 정책만족도	9.1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대중교통 연계 미흡지점 발굴·개선을 위해 빅데이터*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이용수요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(11.27)
 - * 모바일 DB, 교통카드 DB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이동수요,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
- 평창올림픽에서 다양한 신규 교통수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,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향후 확대 가능성을 타진
 - 광역이동(수도권 등 → 개최지)의 3.9%를 분담 (1.4만/총 33.7만), 개최지 지역 내 이동의 11%를 분담 (1.4만/총13.1만 - 버스 제외)하는 성과 달성
- 육상교통과 ICT기술의 융합에 따른 新교통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(Smart Mobility)에 대한 정책적 방향 모색
- 미래 모빌리티 분야 산·학·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,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변화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
 - 다채로운 논의를 위해 토크콘서트 형식의 정책간담회를 개최(6.7, 9.7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포럼 구성·운영계획 마련('18.4) 후 KOTI 예산확보 완료('18.4), 발족 행사 기획단계에서 선거 등으로 인해 중단
- 산업·과기부 등 타 부처 추진 사업과의 중복논란 해소, KAIA 과제 추진체계 변동 등으로 기획안 및 예타 신청 미완료*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카풀 등 교통 O2O 서비스 확대에 대한 운수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, 다양한 관계자를 대화의 場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난항
 -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, 신-구 업계 간 대승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소통채널 구축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2	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발족, 메가 R&D 연구 과제 기획안 마련, 메가 R&D 과제 예타 신청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교통관련 업계 의견 청취, 평창올림픽 카셰어링 미확보 부지 조속 해결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	스마트 모빌리티 R&D 기획안 마련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평창올림픽 기간 중 교통 O2O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회원가입 증가, 약 27,300명의 이용실적 등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스마트공항) 생체인식 탑승수속 도입 및 확대, 드론활용 공항시설관리, 출입국장 로봇, 자율주행차 도입 및 셀프체크인, 웹·모바일 활성화
 - 생체인식 탑승수속(1월: 김포·제주, 하반기: 김해·대구·청주), 조류퇴치·외곽경비용 드론(인천, 3월), 항행시설점검용 드론 도입(한국공사, 3월)
 - 공항 접근성 개선과 공항 여객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개장 및 운영('18.1~)
- (정규직 전환 : 인천) '17.12.26일 노·사·전 기본합의(직고용 2,940명, 자회사 6,481명)를 토대로, 급여/복리후생 등 세부 전환방안을 마련
 - 자회사 전환인력들의 우려사항(법인청산, 용역업체 방식 운영 등) 해소를 위해 공사법 개정(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, 수의계약 근거 신설) 추진
 - * '17.12.26일 노·사·전 합의를 자회사의 자율경영과 안정적 운영이 가능토록 공사법에 근거를 명시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함
- (정규직 전환 : 한국) 노·사·전 협의를 통해 연내 전환방안을 마련 하고 약 1,100명을 정규직(직고용/자회사)으로 전환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자회사 전환인력들의 우려사항(법인청산, 용역업체 방식 운영 등) 해소를 위해 공사법 개정(자회사에 대한 업무위탁, 수의계약 근거 신설) 추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5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시 법인청산, 용역업체 방식 운영 등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법제처 분석과 노·사·전 및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의안 도출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인천·한국 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드론, ICT 등을 활용한 공항 운영 경쟁력 제고

◆ 성과목표 3. 신산업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를 고도화한다.

1

공간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인프라 지원

다소 미흡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마련

- 영세사업자, 취업준비생, 스타트업 등이 공간정보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융·복합 개발플랫폼(PaaS) 제공
- 공간정보 융·복합 아이디어만 있고 사업화 능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, 대학생 등에게 상품개발 환경제공 및 사업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
- * '18년 아이디어 발굴로 10개팀 선정, 중기청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관리 ('16년 5개팀, '17년 10개팀 상품개발 완료)

○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 확산

-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의 인지도 제고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 부처(과기부, 행안부 등) 및 언론·학계 등 참여 포럼 운영

○ 고품질 공간정보 데이터서비스(DaaS) 제공

- 분산된 공간정보 시스템(대전·광주 통전 등)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한곳에 집적하고 사용자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데이터 제공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에 있어, 세종 행복도시 내 지구·지역별 세부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일정 지연 발생
- 창업 지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과정 다소 미흡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아직도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는 공간정보 분야의 활용 유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가 절실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5	클라우드 기반 창업 플랫폼 기술 협약(과기부-우리부) 지연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정책수요자의 의견수렴과 정책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, 정책포럼 개최 등 정책현장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고취하고,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정보 관련 산업 성장 기반 마련
3-3. 정책만족도	8.7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청년일자리 대책) 인력양성계획 및 추진, 창업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추진(2월~)
- (청년창업 지원) 공간정보 분야 예비·초기창업자 대상 공간정보 융·복합 페스티벌 개최(5월) 등 통해 우수 창업기업 선발
 - 선발된 우수 기업에 창업보육센터(공간드림센터 등)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금, 창업공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
 - 특히, 전문가들과 멘토링 형식의 Solution Day(9월) 및 자문단을 운영(8월, 11월)하여 창업기업별로 맞춤형 문제 해결 지원
- (인력양성) 취업캠프(4월)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 역량을 제고한 후 기업설명회·잡페어(5월)로 학생-기업 간 매칭 유도
 - ⇒ 공간정보 특성화고(80.8%) 및 아카데미(90%) 취업률 목표 달성
 - 협약기업 수요를 반영하여, 아카데미 교육대상을 IT 전공자까지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현장실무과정 신규 개설 및 교육 회차 확대
 - * (교육대상) 공간정보 전공 → 공간정보 전공 + IT 전공
 - (교육과정) 공간정보 현장 실무과정 2개 개설, 교육과정 3회차 추가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창업) 창업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구체화 등 통해 기업의 생애주기별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적 안착 유도 필요
- (인력양성) 특성화고, 전문대 등 단기간 교육 한계를 극복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융·복합 교육과정 업데이트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창업전문가-창업가 자문단 운영으로 지원사업 정책방향 점검, 공간정보 특성화고·전문대·대학원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기관 및 학생 의견 수렴 등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청년창업 수혜 대상기업 확대, 기업설명회·잡페어(5월)로 학생-기업 간 매칭 유도 공간정보 관련 취업률 제고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신산업입지지도 작성 등 6개 과제에 대한 공간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정책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
 -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 인자(패턴) 분석
 - * 분석 목적 : 신산업단지 입지(후보지 선정) 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
 - 교통카드 DB를 활용한 대중교통 현황 분석(협업 : 전주시)
 - * 분석 목적 :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도출하여 버스노선 등 조정
 - 역세권별 토지이용 구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(협업 : 부산시)
 - * 분석 목적 : 역세권 개발방향 및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근거 마련
 - 화재 대응 취약지역 분석(협업 : 소방청)
 - * 분석 목적 : 소방관서의 화재 대응 취약지역 도출에 활용
 - HACCP 인증과 식품안전사고 상관분석(협업 : 식품의약품안전처)
 - * 분석 목적 : HACCP(식품위생관리) 인증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예방효과 파악
 -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(협업 : 국민건강보험공단)
 - * 분석 목적 : 의료이용 생활권 분석에 활용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수요조사를 통하여 공간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선정·수행하고 있으나, 시간적·공간적 범위가 일회성·지엽적에 그치는 실정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지속적, 전국 단위로 확산 가능한 분석과제 기획·발굴 등 공간 빅데이터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업무 체계 개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수요기관(LH) 협의 및 전문기관(LHI, 국토연구원) 자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과업내용 조정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요청한 공간빅데이터 분석을 수행(수요기관과 협업 추진)하여 국가 정책의 과학적인 의사결정 지원
3-3. 정책만족도	9.1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연계추진 시범지역 지정·운영
 -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(불규칙형) 구역을 연계추진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협업과제 마련
 - * (대상/필지수/사업비) 인천(동구), 경기도(고양시), 강원도(동해시), 충북(제천시), 충남(공주시), 전북(군산시), 전남(나주시), 경북(포항시), 경남(밀양시) / 2,967필지 / 8.3억원
-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의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제도개선(안) 마련
 -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를 이용한 지적측량 수행 시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지적공부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
 - * 19개 실험지역(원점·도면특성·성과결정)을 선정 후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를 이용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의 정확도 비교·검증
- 건축물 예상 수량 조사(30,234개) 건축물 등록에 대한 현장데이터 취득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청취(7개 지역, 20개 사업지구)
 -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매뉴얼 갱신, 건축물 데이터 활용연계를 위한 방안 마련(12월 추진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지적조조사사업과 도시재생 연계사업 완료후에도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 이웃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사업간 적극적 협업 필요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사업을 확산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, 협업사업 추진기준을 마련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사업지구 현장방문,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간담회 개최, 건축물 데이터 활용연계를 위한 T/F 구성·운영 등 대응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의 협업·연계 추진, 건축물 데이터의 활용 연계방안 마련으로 국민 공간정보 활용 확대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계획수립) 2018년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계획 수립
 - 추진방향, 기관별 업무분장, 세부추진 일정 등을 마련
- (측량 및 성과검증) 드론활용 도서에 대한 측량 및 성과검증 완료
 - 드론활용 도서측량실시, GNSS측량 방법으로 검증, 도해지적 성과내 양호
 - * 경상남도 통영시 사이도(무인도, 15필), 수도유인도, 251필)
- (매뉴얼제작 배포) 드론 활용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표준 매뉴얼 제작 배포 · 완료(12.27)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드론 활용 도서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표준매뉴얼을 제작 배포 하였으나, 도서 등록 · 정비에 있어 정책효과 발생정도가 미흡
 - 시범사업을 통해 도서의 드론측량과 성과는 양호 하여 매뉴얼을 제작 하였으나, 배포시기(12.27) · 홍보의 저조로 활용 실적이 저조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도서 등록 · 정비 추진) 표준매뉴얼을 활용 하여 조속히 도서의 등록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등 추진
- (매뉴얼개선 및 홍보 추진) 표준화되고 정확한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 사업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매뉴얼의 개선 및 홍보 적극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도서측량 성과 공유를 위한 지자체 업무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(4회)로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마련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도서지역의 정확한 등록으로 토지 소유권 및 재산권의 보호, 해양레저 및 해양개발에 대한 활용가치가 증가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국제표준 획득) ICAO의 SBAS 위성항법시스템 국제표준화 이행 및 전 세계 확대운영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표준체계 획득
 - 전세계 7번째 보유국에 대한 ICAO ANNEX 10(2.28) 및 국제전기통신 연합(ITU) 등재(3.28)*, 美공군 미사일사령부 위성사용코드(PRN) 획득(4.23)
 - (기준국 위치확정) 한·유럽 협력기관 공동 상세설계·개발구축 추진, 기준국 후보지 정밀분석 및 전문가 기술검토위원회 개최(정책위원회 결정)
 - 전 국토 확장성, 최소 기술적 요구조건, 사이트 접근 및 보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상 기준국 위치 선정완료*
- * 위치 : 제주공항, 양양공항, 양주VOR, 광주로란, 영도 DGPS, 울릉도동, 제주추적소 등 7개소
- (협업인증) 유럽항공안전청(EASA)과 인증 공동검사, 기술자문 등 협력을 통해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 인증 기술력 습득·제고
 - KASS 개발·구축사업 일정에 따른 설계분야별(HW/SW) 유럽항공 안전청 협업 인증활동 실시, 기술자문·교류를 위한 정기회의 시행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, 미국, 해외공동 개발업체(프랑스 탈레스社), 유럽집행위(EC) 및 유럽항공안전청(EASA) 등 기관과 국제 협력업무 시행
 - 우리나라와 각 국가 또는 기관 간 입장 및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 구축 일정지연, 기술력 습득 제한 등 위험요소 잠재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KASS 개발구축 및 기술획득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국가 또는 기관별 주요이슈(위험요소 등) 예측·관리 및 정부주도의 선제적 대응(협력·소통) 강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원활한 KASS 개발 구축을 위해 연구진 워크숍, 전문가 기술자문위원회, 사용분야 외부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사업 효율화 추진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한국형 SBAS 개발 및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'20년 차질 없는 대국민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및 관련 분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지원

【전략목표Ⅴ】 국토교통 산업의 상생·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

◆ 성과목표 1. 건설산업 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

1

건설산업 구조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추진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건설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건설산업 혁신방안’ 마련·발표(6.28, 경제관계장관회의)

* 건설기술, 생산구조, 시장질서, 일자리 4대 부문 혁신 추진

-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·업종 등 생산구조 혁신 기본방향에 대해 1차 노사정 선언을 통해 합의(7.25)

- 치열한 논의를 거쳐 40년간 이어져온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2차 노사정 선언*을 통해 ‘생산구조 혁신 로드맵’ 발표(11.7)

* (참석자) 장관, 건협·전문협 회장, 한국노총·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

- 하도급자 보호 강화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개정안*(박덕흠의원 발의, 11.9)도 국회 본회의 통과(12.7)

* 공동수주 중소기업체 지위 보호, 직접시공 산정방법 개선,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등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향후 업역 폐지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건설업계와 지속 협의를 통해 발주 가이드라인, 상호 실적 인정기준 등을 추진

- 업종·등록기준 개편을 위한 하위 법령정비(‘19~)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86	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’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전문가 토론회, 내부 점검회의, 업계 및 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의견수렴,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정간 긴밀한 소통 창구 마련 등으로 노사정 합의 도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8.4	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’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중소업체 보호, 직접시공 산정기준 변경,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등 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하고 노사정 공동선언(11.7)을 통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등에 합의
3-3. 정책만족도	8.9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스마트건설) 기술의 발전목표와 이행과제를 제시한 로드맵 수립·발표*를 통해 국가 정책방향을 시장에 전달하고 업계의 변화 유도

* 로드맵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하고 보도자료 배포(10.31)

- (건설시공) 관계기관 의견수렴*을 거쳐 **일요일 휴무제**,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 의무화 등 ‘**공공 건설공사 건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**’ 발표(7.12)

* 업계·노동계 의견수렴, 정책점검회의 2회(국토부·기재부차관), 일자리위원회 등

- (기반시설법) 공동TF* 운영을 통해 기재부와의 이견을 해소하고 법사위(12.5) 및 **국회 본회의(12.7)** 의결을 거쳐, 제정·공포(12.31)

*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제정법안이므로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자는 기재부 의견에 따라 국회·기재부·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TF 운영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제도 개선, R&D 사업 추진, 창업 활성화 등 로드맵에서 제시한 이행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**변화**를 이끌어 나갈 필요
- 민간에서 **활성화**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(CM) 기업의 공공분야 입찰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민간실적관리 근거 마련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65	건설CALS 정보활용 개편방안 마련 지연, CM 통합 CM협회 승인 신청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포럼, 토론회, 공청회, 공동TF 운영 등을 통해 의견수렴,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 조율을 통해 기반시설법 연내 통과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20	‘건설기술진흥법 개정’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스마트건설 로드맵 수립으로 방향 제시 및 업계 변화 유도, 건설공사 건설시공 강화로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, 기반시설법 통과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편적 관리체계 정립
3-3. 정책만족도	9.1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○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

- ‘수주에서 투자’로의 해외건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발굴 및 개발·금융지원 등 체계적·전문적 지원체계 고도화

- 별도의 정부 예산없이 단기간(8개월)에 투자개발사업(PPP)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*) 설립('18.6)

* 추진경과 : 해촉법 개정('17.10.24) → 법 시행('18.4.25) → KIND 설립('18.6.8)

- 민·관* 공동으로 약 1,030억원 규모의 글로벌인프라펀드(GIF 7호)를 추가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금융역량 강화 지원('18.12월)

* (투자자) 우리은행, 신한은행, KIND, 한국공항 등 10개 기관

- 지속가능하도록 정보수집을 개선하고 정보의 연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심층정보를 공유·활용할 수 있는 개편방안 마련('18.12.4)

*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“정보부족”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이라고 응답 (해외건설 진흥계획 수립연구, '14.11월, 해건협)

** 관련 용역('18.7~'19.3) 추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('18.11.30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KIND 조기 안정화) 신설기관(6.8 설립)인 KIND가 조속히 정착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체계 확립 필요

- (금융지원 확대) 해외투자개발사업 속성상 대규모의 투자자금*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진출 지원 필요

* KIND에서 검토 중인 사업 인도네시아 철도사업 등 총 50건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공공·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분야별, 국내·외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구축, KIND의 설립 필요성·긴급성 등을 바탕으로 예산지원 없이 관련 인프라 공기업들을 설득하여 초기 자본금을 확보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KIND 설립("18.6), 인프라펀드 확대("18.12), 정보시스템 설계 등 지원체계(사업발굴-개발-금융지원) 고도화를 통해 수주 제고 기대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고위급 인프라 외교를 활용한 해외건설 시장다변화와 수주성과
 - 신남·북방정책과 연계한 고위급 대형 인프라사업 참여협의를 통해 중동에 편중된 해외건설 시장을 아세안·유라시아 등으로 다변화
 - * (수주비중) 아시아 : '14년 24.1%→'18년 50.5% / 중동 : '14년 47.5%→'18년 28.7%
- 정상순방 등 인프라 외교를 통해 우호적 환경조성과 후속진출을 가속화한 결과, '18년 해외건설 321억불 수주로 회복세 진입
 - UAE(수주 1위), 베트남(2위), 러시아(3위), 싱가포르(4위) 등 고위급 방문과 후속지원을 집중한 국가들이 수주반등 견인
- 정부간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한국형 인프라 모델 반영 협의
 - 아세안 10개 회원국과의 인프라 상생 협력을 위한 '제1차 한-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'를 신설, 성공적 개최(9.17일, 서울 코엑스)
 - 국내 최대 글로벌 인프라 행사인 GICC도 28개국 장·차관을 비롯한 50여개국 200여명의 해외인사가 참석한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
 - * 주요 해외 발주처 프로젝트 설명회(32건), 발주처와 우리기업 간 1:1 상담회(533건) 등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대형 시공 중심의 양적성장에 집중된 인프라 외교로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및 동반진출 등에 지원이 다소 미흡
- ☞ '19년에는 대·중소기업 동반진출 및 상생협력 촉진 강화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건설·엔지니어링社, 인프라 공기업, 정책금융기관(수은, 무보 등) 등과 다각적인 프로젝트별 현황점검 및 수주지원방안 협의, 라오스 댐 사고 관련,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실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신남방·북방경제 정책과 연계한 고위급 협력 활동, 맞춤형 진출등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실적 증대('17년 290억불→'18년 321억불)

□ 주요성과

- (건설Eng. 중심제)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에 해외의 평가기준과 발주절차를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
 - 중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을 개정('18.12.11.) 하고, 업체 선정을 위한 및 심사기준(국토부 예규)을 제정('18.12.31.)
- (건설기준 정비·글로벌화) 국토부 건설기준과 산업표준(KS)의 상이한 내용 및 오류를 정비하고 건설기준의 영문화 및 국제화 추진
 - 우리부 건설기준과 KS의 상이한 내용을 조사하여 정비 완료('18.08.), 건설기준 영문화 심의상정 완료('18.12.)
- (정책효과) 우리나라 Eng. 발주제도와 기술기준을 글로벌화한 것으로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 지원에 매우 효과적
 - 그간, 우리나라 내에서만 통용되는 발주제도, 건설기준으로 업계는 해외진출시 국내와 다른 제도·기준에 이중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,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와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건진법 개정과 심사기준 제정 방침결정 등은 연내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나, 기재부의 승인 통보 지연으로 고시 절차만 다소 지연('19.1.9. 고시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최초 도입된 건설Eng. 중심제를 차질없이 시행('19.3월~)하고, 향후 중심제 적용 대상을 국가계약법에서 지방계약법까지 확대 검토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1	「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 제정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타부처(기재부), 관계기관(조달청, 공사·공단)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회의, 관련 연구용역 시행 등을 통해 의견 수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5	「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 제정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건설엔지니어링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 되고, 기술력이 높은 경우 낙찰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업체간 기술 경쟁을 유도

◆ 성과목표 2. 물류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.

1

화물운송시장 종사자 보호 및 경쟁력 강화

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①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, ② 위·수탁계약 갱신청구권 확대, ③ 업종 개편 등을 반영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개정(' 18.4.17 공포)
 - 야당 원내대표, 정책위의장, 개별위원, 전문위원 지속 면담 추진 및 선제적 설명 등으로 국회 교통소위(2.21), 상임위(3.20), 법사위(3.29) 통과
 - * 업종 개편, 위·수탁계약 갱신청구권 확대 : '19.7.1 시행
 - ** 화물차 안전운임제 : 컨테이너,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3년 한시 도입('20.1.1.~'22.12.31)
-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성공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·화물업계·차주 간 결의대회 개최(' 18.5.3, 여수화물차 휴게소)
 - * 총 300여명 참석(국토부 장관, 업계 90여명, 화물차주 200여명 등)
- 원가조사 수행을 위한 ' 19년 예산안(정부안) 10억원 확보(' 18.11), 하위 법령 정비(' 18.12 입법예고) 등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제도 보완) 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운임 협상에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를 공표*, 합리적 운송계약 체결 지원(시행령)
 - * 화물차 안전운송원가제('20~) : 철강, 일반형 화물차(카고형 트럭)부터 도입 예정
- ☞ 원가계산이 어려워 적정운임 여부를 알지 못하는 영세차주들 간의 과당경쟁, 최저가입찰 등으로 인한 과도한 수준의 운임 하락 방지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화주·업계·차주,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와 대응을 통해 절충안(안전운임제 단계적 도입, 참고원가제 대상 확대) 도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화물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·과적·과속운행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, 업종개편으로 화물운송시장 경쟁력 강화
3-3. 정책만족도	9.0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신고센터) 물류시장 내 ‘갑질’로 인한 분쟁을 국토·해수부가 조정·권고할 수 있는 ‘물류 신고센터’ 설치 등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(‘18.9)
 - 물류산업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‘물류산업 동반 성장 협의체’ 구성(‘18.12)
- (생활물류)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물류 산업의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(‘18.4)
 - 기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감안하여 연구용역을 실시(‘18.5~9)하고, 업계·학계·언론·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추진 계획
- (스타트업) 국내 처음으로 민간과 협업하여 결성된 물류 투자펀드를 기반으로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·투자연계 지원(3건, 25억원)
 - * (조성규모) 453억원(‘17~‘25), (투자실적) 3건, 25억원(배달대행, 저온보관 등)
- (인력양성) 물류·유통 등 융복합 新사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인력 수급분석, 추진과제 및 사업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* 실시
 - * 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분석 및 사업개선방안 연구(교통연구원, ‘20년도 신규 사업 시행을 위해 정부예산 반영 등 추진)
- (채용박람회 등)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및 채용설명회, 물류전문인력 DB센터 운영, 취업캠프 등을 통해 구직자-물류기업간 일자리 매칭 강화
 - * (채용박람회) 72개 기업 및 3,824명 참관객 참여 / 86명 취업성사(11.15 기준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인력양성 등) 구직-구인자간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를 위해 임금, 일 생활 균형, 고용안정성, 청년고용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기업을 발굴하여 채용박람회 등을 계기로 지속 홍보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업계, 유관기관과 상시협의를 통해 국회입법 대응, 공모전, 네트워킹, 공모전,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현장수요자 요구사항을 청취 등 정책현장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, 생활물류 육성방안 마련, 스타트업 지원기반 조성 등 물류시장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기여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및 물류R&D 개발 확대
 - (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)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의 근거, 인증범위 및 기준, 인증 시 지원 내용 등 마련
 - (물류R&D) 첨단 물류기술 연구개발 도입 확산을 위해 자율 운송 로봇 및 물류센터 첨단화 기술 개발 완료, 상용화 추진
- ② 물류단지, 내륙물류기지 등 거점 물류시설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
 - (일반 물류단지) 물류단지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에 포함된 국·공유 재산에 대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기준 완화
 - (도시첨단 물류단지)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도심 물류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첨단 물류단지(시범단지 1개소) 지정을 위한 투자의향서 제출
 - (물류기지) 활용률이 저조한 내륙컨테이너기지(ICD)에 물류창고 신축 및 용도전환 등 기능조정을 통해 내륙물류기지 활성화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물류R&D 성과물이 물류 현장의 노동절감 및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, 기술개발 이후 즉시 상용화되도록 체계적인 지원 필요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 대응 및 물류산업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물류 R&D와 물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수요자 의견 반영, 다산 신도시 사태 등 물류분야 사회적 쟁점 해결을 위한 스마트 융복합 물류기술개발 착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대국민의 물류 서비스(택배 등)가 향상되고, 국가물류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기대

◆ 성과목표 3.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중심 국토교통행정을 구현한다.

1	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	보통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결정) 정규직 전환 결정 대상자 약 2.8만명 전원 전환결정 완료
- '17년 발표된 범정부 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” 및 기관별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, 국토부 산하 21개 기관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전환결정 100%달성
- '18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2개 기관(SR, 건설기계안전관리원)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완료
- (기타 공공기관 평가편람 마련)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하여, 국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편람 전면 개편
- (공공기관 일자리 창출, 사회적 책임 강화) 여성관리자 확대 실적관리, 공공기관 인력증원 방안 마련 및 증원 심의, 불공정 임대차계약 조사·시정 등 추진 완료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노·사, 노·노 간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하여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 강화 등 필요
- 주기적인 공공기관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결정과 전환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당부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산하 기관장들의 관심과 노력당부를 위해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, 실무자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수렴, 국토부-산하기관 상시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 전환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 적극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위험물질 운송정보 공유 및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위험성 감소 및 선제적 대응·협조체계 구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
3-3. 정책만족도	8.6	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정책 확산) 국정 과제인 ‘서민 주거 안정’, ‘교통 공공성 강화’ 등 정책 소식을 온라인으로 3천만명 이상에게 확산해 정책 인지도·관심도 제고
 - 이를 통해, 정부업무평가(홍보분야) SNS 활동·온라인 이슈 대응 1~3분기 연속 ‘우수’, 우수콘텐츠 국민 평가 ‘2위’ 평가 기록(장관급기관)
- (국민 참여 확대) 정책 제안 등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, 세부 정책별 국민 의견을 듣는 다양한 계기 마련
 - ‘자동차 번호판 체계’, ‘교통안전 슬로건’ 등 다양한 정책 의견 수렴 계기를 통해 총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정책 의견 제시
 - 국민 의견 반영 경과·결과는 콘텐츠로 제작해 피드백하고 정책에 반영, ‘교통안전대책’ 등 중요 정책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직접 소통
- (소통 역량·채널 강화)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고, 추진 조직 신설 (“디지털소통팀”)
 - 주거복지 등 정책 영상 ‘영화관 상영’, ‘공익광고 전광판 노출’, ‘산하 기관 매체 홍보’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 정책 확산력 강화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뉴미디어 운영 수준은 높은 편이나, 디지털 콘텐츠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소비자 트렌드와 국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개선 필요
 - 또한,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,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대국민 직접 소통 계기 확대도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정책참여 플랫폼 구축 및 국민정책참여 확대, 국민 직접 소통 등 현장의견을 충실히 수렴국민 일상에 영향력이 큰 주거정책, BMW, 용산공원 등 현안에 집중하여 대응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국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콘텐츠 제작으로 SNS 신규 가입자 증가, 우수콘텐츠 국민평가 결과 2위를 차지, 국민정책 제안, 전문가 자문의견, 정책기자단 자문 등 다양한 경로로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을 마련하는 등 효과 발생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① (부패취약분야 개선) 관계기관 합동 「반부패 종합대책」(‘18. 상) 중 우리부 소관과제(3개) 적극 추진

* ① 재건축 수주 비리방지(정비사업 수주질서 확립)

② 불공정한 불법하도급 담합 근절 / ③ 화물운송 불공정 근절

② (부패 감시기능 상시 운영) 취약시기 감찰 강화, 비위행위 기획점검, 촘촘한 감사활동 등 사각없는 감시기능으로 부조리 차단

- 연말연시, 명절 등 취약시기와 복무 사각지대인 지방소재 기관 집중 점검, 대민접촉이 빈번한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등 감찰활동 강화

* ‘18.11월 현재 총 11회 실시(69일간 69명 투입, 복무·보안위반 등 537건 적발)

- 갑질행위 집중 모니터링, 민원처리 지연 등 업무해태 중점 점검, 성 비위행위 상담* 및 단속활동 강화 등 비위행위 기획점검

③ (신고자 보호 등 사후관리 강화)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 강화, 비위 행위자 처벌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엄정한 사후관리

- 부패·공익 신고접수 및 결과통보 시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신고자 보호지침 개정(9.18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○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조기 유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활동을 강화

- 특히,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풍토 기반을 넓히기 위해 민관협업 강화, 청렴시민감사관 역할도 확대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청렴도 제고대책 보고회, 소속기관 간담회, 노사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의견수렴,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행동강령 개정,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, 맞춤형 청렴교육 등 실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적극적인 감사·감찰 활동으로 조직내외 청렴 문화 확산 및 엄정한 처벌기조 확립, '19년 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결과, 부패사건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중점법안에 대한 간부급 대국회 협의, 장차관님 심층보고, 쟁점 사전해소 노력 등을 통해 법안 상정건수와 처리건수를 대폭 제고
 - '18년 국토부 중점 추진법안 총 103건 상임위 상정, 법안소위를 거쳐 이중 80건이 상임위 통과
 - * 화물자동차법(안전운임제도 도입 및 지입제 개선), 대도시권광역교통법(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치), 철도안전법(차량개조 승인제 신설)
- 법률 및 하위법령 제·개정 시 총 540건에 대한 체계자구 등 법령 사전검토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법령입안을 적극적으로 지원
 - 사전검토를 통해 국회심의 및 규제·법제처심사 시 법률적 분쟁 사전해소 및 입법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 마련
- 법제처 법안심사 담당자(국토부 심사 담당)와 함께 국토부내 법령 입안자 대상 법안설명회를 개최(1회)
 - 신고제 합리화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입법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, 법안 입안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법안설명회 개최 시 기초교육이 필요한 직원과 심화교육이 필요한 직원과의 수준 차이가 있었으므로, 향후 설명회 개최 시에는 기초-심화단계로 구분하여 수준별 법제 교육 실시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타부처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사전협의 철저시행, 이견 또는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 수정대안을 마련하여 합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주요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대국회 대응을 강화, 특히, 국회의원, 상임위 등과 긴밀한 협조시스템을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입법을 달성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빅데이터 정책방향 수립) “국토교통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변화 관리 방안” 연구를 추진하여 **비전 및 전략 수립**(7월, 프리즘 등록)
 - “유기적 국토교통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” 비전 달성을 위한 **3대 정책 목표와 6개 추진전략 도출**
 - * 연구결과를 반영, “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유통·활용체계 정보화 전략수립” 사업 발주
- (다양한 통계컨텐츠 제공) 통계누리 이용자의 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**시각화 컨텐츠 제공 및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추진**
 - 일부 통계대상으로 지도, 대시보드 등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 기초자료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마이크로데이터 기능 추가
 - * (지도) 자동차등록통계 (대시보드) 주택수, 지적통계, 공시지가
- (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) 부동산 매매·전월세 가격, 상업용 부동산 상가권리금, 자동차 종합정보 등 **주요데이터 39종 개방**
 - * (‘18.11월말 기준) 총 39종 중 17종 개방, 나머지는 12월말까지 개방 예정

□ 미흡 원인분석 결과

- 정책연구 용역(‘18.7월)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**ISP 용역을 발주(‘18.11월)**하였으나 유찰 등으로 일정 지연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‘19년 ISP 용역을 통해 민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 활용 모델을 발굴함으로써, 산업계의 데이터 플랫폼 활용 가능성 증대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67	국토교통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ISP 수립 미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혁신성장 3대전략투자분야 추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플랫폼 조기구축이 가능하도록 사업 적극 참여, 2019 경제정책방향 세부과제에 교통.국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포함, 대학생 등 청년대상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 개최하여 붐업 조성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국토교통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여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으로 이용 활성화 촉진,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.제공 함으로써 국토교통분야 통계에 대한 대국민 이해 및 활용도 제고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결함신차 교환·환불) 자동차관리법 시행령·규칙 개정(11월) 및 전문가, 제작자 간담회 등을 거쳐 교환·환불중재규정(안) 마련(12월)
-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를 구성하고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중재 실시(12월)
- (리콜제도 개선) 당정협의(8월), 국회공청회(8월) 등을 거쳐 관계부처합동으로 「리콜대응체계 혁신방안」(국정현안점검회의, 9.7) 마련
- (등록번호판 개선) ‘숫자 추가방식(123가1234)’ 확정으로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 2억개 확보 완료
- 번호판 고시* 개정(8월) 및 디자인 도입 방안 마련(12월)
 - *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('18.8.27)
- 온·오프라인 국민 선호도조사(3~4월, 10~11월), 공청회(5월), 디자인 및 등록번호판 관련 업계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 대안 마련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결함신차 교환·환불) 신규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원발의 법률 개정 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차등 적용 필요
- (리콜제도 개선) 향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,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의 인력증원, 결함조사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5	교환환불 중재규정안 이해관계자 이견 협의 지연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소비자단체, 제작사 이견을 반영한 절충안 마련 후 양 당사자 모두가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견 조정하는 정책현장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결함신차 교환환불, 리콜제도 개선 등으로 자동차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진흥원 설립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
 - 국민에게 질 높은 피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제조합의 지속 가능한 감독 체계 환경 마련
- 진흥원 조기 안착을 위한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운영방안 마련
 - ☞ 진흥원 출범으로 연간 공제금액(보험금)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공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 마련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손보사 수준으로 공제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조직운영, 인사, 회계, 업무 전문성 등 공제조합 역량 지속 강화 필요
- 사업용 차량 사고 피해자 권익보호, 공제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, 조합 역량강화 등 전략적 추진 필요
- 진흥원의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공제조합 분담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독립적·객관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대방안 마련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는 일부 공제조합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진흥원 설립 추진을 통해 공제조합원과 대국민 보상서비스 만족도 제고 기대

4.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

과제명	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	조치계획(조치시한)
I - 1-3	○이전공공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역량이 있는 기관에 사업 참여 유도를 집중	○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에 대한 운영 컨설팅, 관계기관 협의 등 집중 지원('19~계속)
I - 1-7	○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신규 지역계획의 해안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과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 필요	○'18년 조치내용 -사업의 안정적 지원 및 재원확보를 위해 해안내륙발전법 존속기한 연장('20년→'30년)을 위한 법률 개정·공포('18.12.31.) ○'19년 조치계획 -신규 지역계획 반영을 위해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변경 추진('19년 3분기 예정)
I - 2-3	○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(표준모델) 보완	○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(표준모델) 보완 및 배포('19.4월)
I - 2-4	○전과 공동주택 정비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, 지역 명소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	○'19년 사업예산을 조기에 교부,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·지원 추진('19년 수시)
I - 3-1	○중점관리지정업체(자원)에 대한 현실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	○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 개선 방안 추가검토 건의(지속)
	○재난안전 업무 기피로 인한 사기 저하, 신규자의 낮은 업무이해도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, 교육 확대 등 방안마련	○ 국가민방위 교육원 등 다양한 재난·안전 교육 파견(수시) ○ 안보·안전관리 현장체험(수시) ○ 포상추천(반기)
I - 4-1	○국토공간 품격향상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선진화 산업진흥 ○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률 제고를 위한 독려필요	○총괄·공공건축가 제도 및 공간환경전략계획의 '19년 시범사업 확대 및 장기적인 제도운영 도모 필요 ○법적 의무대상(설계비 2억원 이상)은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발주기관 대상 적극 계도·담당자 교육 등 강화(연중)
I - 4-3	○용산기지 임시개방 관련 연구용역 착수일정 지연(9월→12월)	○임시개방 연구용역 착수('18.12월) ○관계기관(미군 등)의 진행상황 월별 점검('19.上)용역 준공('19.8월)

I-4-5	○개방여건이 양호한 수계(금강·영산강)는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처리방안 마련 필요 ○보 개방 상황이 부진한 수계(한강·낙동강)는 개방 확대 및 모니터링 지속 추진 후 처리방안 마련 필요 ○낙동강 하굿둑은 인근 취수원 영향 등을 검토 하여 시범개방 실증실험 추진 필요	○금강·영산강 수계 보(5개) 평가 및 보별 처리방안 마련('19.2,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) ○한강·낙동강 수계 보(11개)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개방 확대 및 모니터링 추진('19년~,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) ○낙동강 하굿둑 운영개선 및 생태복원 관계 기관* 공동 연구용역(2단계, 36억 / '19~'20년) 시 시범개방 실증실험 추진('19년 下) *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부산시, 수공
II-2-3	○제로에너지 주택 목표('25년)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절감기술 및 건축자재 등을 연구·개발 하여 단계적으로 에너지성능 강화 필요 ○선분양 제한 도입 등으로 주요 구조부 시공 결함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었으나 마감공종 품질 확보를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 필요	○에너지성능이 향상 된 주택의 확산·보급을 어렵게 하는 주 원인인 고비용의 자재들을 R&D를 통해 높은 성능을 갖추면서 적정비용으로 개발('21.12월) ○공동주택 품질제고 방안 마련 후 주택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('19.12월)
II-3-4	○허위·과장광고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추진 ○개발업 등록업체 공시정보의 정확성·신뢰도 제고 필요	○전문가·업계 의견수렴, 유관기관 협의 및 개선방안 검토('19.9월) ○공시정보 검증절차 마련 검토('19.12월)
III-1-3	○ 삼성-동탄 광역철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 준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☞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필요	○ 삼성-동탄 광역철도 적기개통을 위해 서울시 등과 영동대로통합개발 TF 지속 운영(계속) ○ 경부선 급행열차 확대계획 운영('19.10월)
III-2-6	○「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」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「항공사업법」 개정안 국회 통과 지연 ○「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 기준」 제정 추진 보도자료 배포 지연	○ 「항공사업법」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('19.3월) ○ 「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」 제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('19.3월)
III-3-4	○평택~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발주 지연 ○일반철도 고속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미완료	○평택~오송 2복선화 사업은 예타면제 확정('18.12)에 따라 금년 기본계획 발주 ○일반철도 고속화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완료('19.3월)

III-3-5	○국민의 안전 및 편의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및 홍보 등 추진	○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,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·간담회 등 추진 필요('19.2~) ○일반국도에 대한 '줄음선퍼터 설치기준'이 마련 되었으나, 기 설치된 줄음선퍼터도 기준에 부합 토록 보수·개량 추진 예정('19~'21) * 일반국도 줄음선퍼터 기본계획(5개년) 계획 수립('19.8)
III-4-3	○도시지역도로 설계기준 마련 ○터널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시설을 포함한 기준 마련	○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안 마련('19.12월) ○ 터널 환기시설 지침안 마련('19.12월)
III-4-5	○ 철도신호시스템의 국산화를 위해 조기 상용화방안 검토 필요 ☞ 3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토대로 신규 노선의 적용방안 검토	○ 한국형 신호시스템 조기상용화 방안 검토 ('19.6.30)
III-4-6	○안전관리 기준 및 정책 수립시 적극적인 홍보 강화 필요	○안전관리 기준 및 정책 수립시 적극적인 홍보 강화 추진('19년 수시)
III-4-7	○조종사 피로관리 기준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지연	○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방침 결정 ('18.12) ○입법예고·규제심사('19.1~2월), 법제처 심사 및 공포·시행('19.3월)
III-4-8	○All-In-One 보안검색장비 인증 시험평가 미완료 -예기치 못한 사업기관의 법정관리로 인해 연구가 일시 중단되어 시험 평가를 완료하지 못함	○사업 주관기관 재선정을 위해 관계기관, 외부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('18.12.28) ○향후 개발된 보안검색장비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유럽 인증 지원(~'20년)
IV-1-4	○감정평가 관련 규정 개정 ○감정평가사 시험제도 개선 검토	○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 개정 ('19.하반기)
IV-1-5	○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토교통 국제협력 로드맵 수립 추진 필요	○국제교통 국제협력 로드맵을 수립('19.6월) 하여, 전략적·효율적 국제업무 수행을 통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적극 지원
IV-1-6	○'18년 내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추진하였으나, 몽골측 내부사정 으로 '19년으로 지연 -몽골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항공회담 개최에 대비	○'19년 한-몽골 항공회담을 차질없이 추진 하여 복수항공사 취항 기반 마련 * 한-몽골 항공회담을 개최(1.16~1.17, 서울), 약 30년간 독점노선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공급력도 확대(75%) 등 조치완료
IV-1-7	○'민수헬기 개발이 차질 없도록 부품 인증 형식증명위원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	○부품인증 형식증명위원회 개최('18.12월)

IV-2-3	○물류R&D 성과물이 물류현장의 노동절감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 필요	○스마트 파워캐리어 등 물류현장의 노동절감에 필요한 R&D 성과물 개발('18년) 및 효율성과 안전성을 충족하는 R&D 지원체계 구축
IV-2-5	○메가 R&D 연구과제 기획안 마련 ○메가 R&D 과제 예타 신청 ○스마트 모빌리티 포럼 발족	○메가 R&D 연구과제 기획안 마련('19.2월) ○메가 R&D 과제 예타 신청('19.2월) ○운수업계간 협의 지속
IV-3-1	○공간정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 건립방안 마련	○국토정보 통합 운영센터 건립방안('19.1.29.) ○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 공모('19.상반기)
IV-3-3	○지속적, 전국 단위로 확산 가능한 분석과제 기획·발굴 등 공간 빅데이터 체계 활용성 확대를 위한 업무 체계 개선 필요	○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성 증진,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체계 개선계획 수립('19.3월)
IV-3-4	○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사업을 확산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, 협업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	○'19년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사업 전국 확산계획 수립('19년 2월) ○협업기준 마련 및 협업업무 지속 발굴('19년 2월 ~ '19년 12월)
IV-3-5	○드론 활용 도서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표준매뉴얼 제작·배포(12.27)하였으나, 배포시기와 홍보의 저조로 매뉴얼의 활용을 통한 도서 등록·정비에 있어 정책효과 발생 정도가 미흡하게 나타남	○주요 지적정책 업무 공유회의 시 매뉴얼 홍보('19. 상·하반기) ○조속한 도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 공모 등 추진('19. 2월) ○의견수렴 등을 통한 매뉴얼 개정 마련('19. 12월)
IV-3-6	○KASS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수의 국제기관과의 주요이슈 등 선제적 대응 방안 보완	○유럽 탈레스 社, 유럽집행위(EC) 방문 및 주요이슈 등 국가 간 협의('19.3월) ○아태지역 국가 대상 위성항법 국제 워크숍 개최('19.6월) ○미래 항행시스템 융·복합 신기술 국제 세미나 개최('19.10월)
V-1-5	○최초 도입된 건설Eng. 중심제를 차질없이 시행('19.3월~)하고, 향후 중심제 적용 대상을 국가 계약법에서 지방계약법까지 확대 검토 필요	○ 건설Eng. 중심제 시행 ('19.3월~)
V-3-5	○빅데이터 세부 실행계획 수립 위한 ISP 용역 지연	○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유통 및 활용체계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 용역 추진('18.12~'19.6)